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2020년 10월 24일(토)

ZOOM 웨비나

주최 및 주관: 비판사회학회
후 원: 한국연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20년도 정부 자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ZOOM 웨비나 화상회의실 안내

[회의실 1]

회의실 ID: 817 7185 8936

비밀번호: 31486220

<https://us02web.zoom.us/j/81771858936?pwd=dUp2SmFlQnZESUZ4MEpVWkVvcUtaZz09>

<진행 세션>

개회사(09:30~09:45)

1부(10:00~12:00) "성장 붕괴의 문화적 재현"

2부(13:30~15:30) "탈-성장 시대의 '혐오주의'"

3부(16:00~18:00) "경계를 만드는 사람들: 이주와 공동체의 경계"

[회의실 2]

회의실 ID: 880 0868 6706

비밀번호: 31486220

<https://us02web.zoom.us/j/88008686706?pwd=cW04amt4akhtMUxGcE1YejgyM0NCZz09>

<진행 세션>

1부(10:00~12:00) "산업과 노동, 다시 읽기"

2부(13:30~15:30)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과 과제"

3부(16:00~18:00) "포스트성장사회의 전망과 과제"

[회의실 3]

회의실 ID: 865 0414 8246

비밀번호: 31486220

<https://us02web.zoom.us/j/86504148246?pwd=d0Zxaml2eTFVcWNYOWZaWkFTZ29aZz09>

<진행 세션>

1부(10:00~12:00)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

2부(13:30~15:30) "생태 정치의 균열 변형"

3부(16:00~18:00) "역사를 역사화하기"

[회의실 4]

회의실 ID: 893 7865 8898

비밀번호: 31486220

<https://us02web.zoom.us/j/89378658898?pwd=dWVheHIwZ2Z3bFNGSTF1MUtXOG1wZz09>

<진행 세션>

1부(10:00~12:00) "성장과 탈성장의 정치경제학"

2부(13:30~15:30) "사회과학과 성장 패러다임"

3부(16:00~18:00) "성장과 인권: 경제발전의 “다른” 원동력“

|| 목 차 ||

1부 (10:00~12:00)

기획세션1. 성장 붕괴의 문화적 재현

사회자 김주환 (동아대)

발표 1 전경모 (서울대)

탈출의 욕망: 2010년대 한국을 대상으로 3

토론자 김선기 (연세대)

발표 2 이우창 (서울대)

페미니스트 서사의 확장과 80년대적인 것 : 영화 <벌새>와 90년대의 재현 5

토론자 오혜진 (성균관대)

기획세션2. 성장과 탈성장의 정치경제학

사회자 백승욱 (중앙대)

발표 1 박지훈 (중앙대)

성장과 탈성장의 문화정치경제학 9

토론자 지주형 (경남대)

발표 2 김상현 (한양대)

어떤 탈-성장인가: 탈-성장 담론들의 기획과 과제 다시 질문하기 10

토론자 서영표 (제주대)

발표 3 이현재 (서울시립대)

발전과 경제를 관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페미니즘과 도시공동체경제 11

토론자 김소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발표 4 장대업 (서강대)

아시아에서 탈성장의 가능성과 방향성 13

토론자 황진태 (서울대)

일반세션1. 산업과 노동, 다시 읽기

사회자 이성균 (울산대)

발표 1 조형제 (울산대), 정준호 (강원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 변화(2008-2018년): 미국, 일본, 독일과의 비교 17

토론자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발표 2 조효래 (창원대)

지역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사례 19

토론자 최인이 (충남대)

발표 3 노수현 (서울대)

하도급 지위와 노동에의 보상 격차: 기업 간 지대의 이전과 지대의 공유 효과를 중심으로 21

토론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일반세션2.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

사회자 김동택 (서강대)

발표 1 김원태 (성공회대)

한국 학교시민교육 교육과정 교과서는 민주공화국 형성자 육성에 적절한가?: 한국.프랑스.독일.스웨덴. 핀란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5

토론자 김형철 (성공회대)

발표 2 오유석 (상지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 한국 학교민주시민교육 이대로 좋은가? 27

토론자 전영은 (경인교대)

발표 3 박인혜 (성공회대)

학교 노동교육의 현주소 29

토론자 하종강 (성공회대)

2부 (13:30~15:30)

기획세션3. 사회과학과 성장 패러다임

사회자 서동진 (계원예대)

발표 1 서영표 (제주대)

신고전파 경제학 패러다임 비판과 생태경제학의 가능성 33

토론자 김민정 (성공회대)

발표 2 박치현 (대구대)

파슨스 사회학에서 경제학과의 경계 만들기 36

토론자 박찬종 (광운대)

발표 3 황선재 (충남대)

탈성장시대의 성장지표: 한국의 발전지표에 대한 비판적 검토 38

토론자 신광영 (중앙대)

기획세션4. 탈-성장 시대의 ‘혐오주의’

사회자 김도균 (제주대)

발표 1 이정연 (서울여대)

혐오의 종교와 광장의 정치: 종교정치의 공간과 성격 변화, 1970년대 ~ 현재 43

토론자 김주환 (동아대)

발표 2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여성혐오와 범죄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대응과 과제 45

토론자 박정미 (충북대)

발표 3 이태정 (성공회대)

反혐오 투쟁의 동학: 일본 가와사키시의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사례 47

토론자 김철효 (전북대)

발표 4 전원근 (숙명여대)

혐오의 지정학 : 냉전분단체제와 호모포비아 49

토론자 임동현 (연세대)

일반세션3.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과 과제 [좌담회]

사회자 임운택 (계명대)

발표 1 김철식 (포스텍)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의 전망 53

발표 2 조계원 (고려대)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정치의 재구성 55

발표 3 이다혜 (서울대)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56

토론자 홍성태 (고려대)

토론자 홍찬숙 (서울대)

일반세션4. 생태 정치의 균열 변형

사회자 박진희 (동국대)

발표 1 김준수 (카이스트)

사회-자연 이분법 균열의 정치생태학: 구피천 구피들의 자연사와 온도의 정치 61

토론자 김지혜 (서울대)

발표 2 최규연 (연세대)

기후변화 담론의 결과론적 수용주의: 한국 에너지전환 담론의 융합 양식을 중심으로 63

토론자 홍덕화 (충북대)

발표 3 김원태 (경상대)

탈성장과 맑스의 사회이론 65

토론자 김상현 (한양대)

3부 (16:00~18:00)

기획세션5. 포스트성장사회의 전망과 과제

사회자 김철식 (포스텍)

발표 1 김민정 (성공회대)

그린 뉴딜과 탈성장을 넘어 '인간적 분배'로 71

토론자 이상헌 (한신대)

발표 2 임운택 (계명대)

포스트 성장사회에서 노동의 변화 73

토론자 홍원표 (前민주노총)

기획세션6. 성장과 인권: 경제발전의 '다른' 원동력

사회자 백영경 (제주대)

발표 1 김아람 (한림대)

'비정상성'이 만들어낸 노동착취의 합리화, '개척단' 77

토론자 김재형 (서울대)

발표 2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2020 한국사회 성매매/성착취 문제의 핵심과 변화를 위한 단초들 79

토론자 정재원 (국민대)

발표 3 이정은 (창원대)

기념일에만 보호하는 식모와 여차장의 권리 81

토론자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세션7. 경계를 만드는 사람들: 이주와 공동체의 경계

사회자 이태정 (성공회대)

발표 1 한준성 (한양대)

고용허가제 문제로 본 한국 한시노동이주제도와 자유주의적 제약 85

토론자 정영섭 (민주노총)

발표 2 우춘희 (매사추세츠대학)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이동의 제한이 이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86

토론자 서선영 (충북대)

발표 3 김철효 (전북대), 고재훈 (전북대), 신민주 (전북대)

결혼이주여성의 수행적 시민권: 익산시장 이주민 비하 발언 규탄 시위의 경험 88

토론자 이태정 (성공회대)

일반세션5. 역사를 역사화하기

사회자 육주원 (경북대)

발표 1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물관/기념관에서 연구하기: 연구주제와 주체를 중심으로 93

토론자 하정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표 2 강인화 (숙명여대)

4·19에서 5·16으로: 병역미필자 축출운동의 전개와 병역주체의 형성 95

토론자 김학재 (서울대)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1 부
10:00 ~ 12:00

기획세션 1
성장 붕괴의 문화적 재현

회의실 1

탈출의 욕망: 2010년대 한국을 대상으로

전경모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탈조선, 탈서울, 탈코르셋, 탈혼, 탈연애, 탈존주의, 탈학교, 탈가족, 탈진 세대, 농촌 이주, 해외 이민, 장기 여행 등 2010년대에 분출되었던 다양한 층위의 사회·문화적 현상 속에서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감각이 있다면, 바로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일 것이다. 이 발표는 ‘탈조선’ 담론을 중심으로 2010년대에 한국에서 나타난 탈출의 욕망이 발생한 경로와, 탈출의 욕망이 빚어내는 실천의 논리와 상상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출의 욕망은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0년대에 생산되었던 언론 보도 자료, 단행본, 정책 문서 등의 공적 언설에서 탈출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크게 네 가지 층위의 발생 경로가 파악되었다. ① 청년세대 담론 ② ‘글로벌’ 청년 정책 ③ 세월호 사건 ④ 수저 계급론이 그것이다. ①에서는 탈출이라는 언표가 청년세대 담론의 시작점에서는 공존이나 연대의 기의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밝히는 동시에, 폐색감을 호소하는 언표 속에서 미발(未發)의 형태로 잠재되어 있는 탈출의 욕망이 존재함을 보인다. ②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청년 해외취업지원 정책이 생산한 ‘잔혹한 낙관주의’가 탈출의 욕망을 생산하는 정동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③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불러온 집합적 우울이 ‘탈출’이라는 기표가 집합적으로 언표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을 형성했음을 밝혔다. ④에서는 2015년경 나타난 수저 계급론을 통해 표현된 좌절감과, 좌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에 대한 혐오감이 탈출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음을 보인다.

다음으로, 2014년 이후에 생산되었으며 탈출의 욕망이 작품 내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문학, 영화, 음악, 미술 등의 문화 텍스트를 선정하여 해석적 접근을 취했다. 그 결과 탈출이라는 욕망이 빚어낸 상상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모티프를 추출할 수 있었다. ㉠ 환란의 풍경 ㉡ 부재하는 풍경의 원인 ㉢ 정체불명의 추격자 ㉣ 막연한 목적지라는 네 가지 모티프가 발견되었다. ㉠은 고층건물이 솟아오른 도심과, 도심의 저층에 깔린 스모그라는 이미지, 혹은 폐허가 된 도심의 이미지로 집약된다. ㉡ 이 풍경을 만들어 낸 원인은 텍스트에 부재한다. 환란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한다. ㉢ 환란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은 무언가에 쫓기는데, 이들을 추격하는 대상은 역설적으로 ‘정체 불명’을 그 정체성으로 갖는다. ㉣ 탈출을 원하는 이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막연하다. 모종의 이유로 자신이 떠난 곳으로 회귀하는 이들도 관찰된다. 탈출의 상상계에서 발견되는 기이한 모티프들은, 부재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탈출을 욕망하는 이들은 무엇에게 쫓기고 있다고 여기는가? 이들은 왜 다시 떠난 곳으로 돌아오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부터(from) 어디로의(to) 탈출을 꿈꾸는 것인가?

문화 텍스트 분석에서 도출된 질문들을, 탈출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실천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대답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탈출의 욕망에서 생성된 가장 강력한 실천 프로그램은 ‘탈조선’ 프로그램으로 상정한다. 이 프로그램의 실천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 웹사이트 <헬조선>의 ‘탈조선 게시판’의 게시글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했다.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SNA)을 주된 방법론으로 활용했고, TF-IDF 지수 기반 빈출 어휘와 어휘 간 연결을 서사의 핵심 노드와 링크로 삼아, 추천 수가 높은 게시글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웹사이트에서 형성되는 집합적 서사를 구성했다.

서사는 크게 세 국면으로 나뉜다. **a) 탈출의 결심과 간파(penetration)**. 탈출의 결심 단계에서는 ‘헬조선’의 계층 고착화, 사회 안전망의 부재, 제도의 작동 방식, 노동 문화 등에 대한 ‘간파’와 여기에서 나타나는 분노가 탈주자라는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b) 탈출의 준비와 제약(limitation)** 탈출의 결심 단계에서 형성된 탈주자라는 정체성과 분노는, 탈출의 준비 단계에 들어서면 수험생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전환된다. 수험생으로의 전환을 야기하는 감정이 바로 문화 텍스트에서 징후적으로 관찰되었던 ‘막연함’이었다.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욕망은 존재하지만, 무엇에 쫓기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막연한 상태에서, 익숙한 수험의 논리가 실천의 논리로 부상한다. **c) 탈출의 실행과 혼란(dislocation)**. 탈출의 실행 단계에서는, 보다 일관적이었던 이전 단계의 서사적 정체성에 균열이 생기며, 탈주한 곳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이들의 서사와, 탈주한 곳도 ‘헬조선’과 다를 바 없다는 서사가 경합하며, 이곳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디에서든 수험생처럼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회귀를 추동한다. 이들은 ‘조선’으로부터(from), 또 다른 ‘조선’으로(to) 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페미니스트 서사의 확장과 80년대적인 것: 영화 <별새>와 90년대의 재현

이우창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이 발표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화 <별새>(2018)자체를 덜 단순하게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중에서도 1980년대적인 전통과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이 영화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주인공 은희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를 하나씩 풀어내볼 필요가 있다. 영화는 이른바 '평범한 여중생의 삶'이 실제로는 가족, 학교, 학원, 자신의 신체, 그리고 1994년의 거시적인 역사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세계들이 교차하는 매우 복잡한 장(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은희는 그 어느 영역에서도 안정감을 얻지 못하지만, 동시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것들이 단순히 선악 구도와 같은 판단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물론 휴학한 운동권 대학생 영지와와의 만남이 그중에서도 특별한 성격을 부여받는다 하는 것은 명확하다. 본인에게 맞는 자리는 찾을 수 없고, 그럼에도 그 사실을 서술할 수 있는 언어는 부재한 1994년의 강남에서 방황하는 은희에게 주어진 구원이 1980년대와 학생운동 전통의 연장선 상에 있는 영지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대표적으로 영화 <1987>(2017)의 여성재현을 둘러싼 논쟁에서, 그리고 1990년대의 '사적인' 여성세계의 평가를 둘러싼 오랜 논의에서 볼 수 있듯, 1980년대의 운동전통과 여성(주의)적인 세계 사이의 관계의 설정은 한국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논쟁주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별새>는 단지 1980년대적인 것의 재현에 여성을 어떻게 위치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넘어, 여성주의적 서사 속에서 1980년대적인 것을 어떻게 위치시킬 수 있는가를 사고하도록 요구한다.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1 부
10:00 ~ 12:00

기획세션 2
성장과 탈성장의 정치경제학

회의실 4

성장과 탈성장의 문화정치경제학

박지훈
중앙대학교

이 발표는 탈성장 담론의 개괄적 소개를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발표는 탈성장 논의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에게 일종의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맥락에서 이 발표는 본 세션의 다른 발표들, 즉 ‘탈성장과 여성’, ‘탈성장 담론의 다양성’, 그리고 ‘탈성장과 제3세계’에 대한 발표들의 서론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발표자는 다음의 사안들만을 간략히 다룰 것이다. 첫째, 탈성장 담론의 출현. 여기서는 탈성장이라는 용어가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탈성장 담론의 시초로 간주되는 문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둘째, 탈성장 담론의 출현배경. 탈성장 담론은 1970년대 초에 등장했다. 때문에, 탈성장 담론은 전후 자본주의, 특히 북대서양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급격한 팽창과 관련이 있다. 또한, 그것은 당대의 주류 경제학의 성장이론만이 아니라 흔히 제3세계주의 혹은 무역회의주의라 불리는 비주류 정치경제학 이론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셋째, 그것의 출현 이후 탈성장 담론과 운동의 흐름. 탈성장 담론과 운동은 1970년대 초반 출현한 이후 몇 번의 변곡점을 겪는다. 그 중 일부, 가령 ‘지속가능한 발전’과 탈성장 담론의 관계 그리고 대안세계화 운동과 탈성장 운동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상기한 것처럼, 이 발표는 독자적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발표들에 앞서 탈성장 자체에 대해 약간의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탈성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어떤 탈-성장인가: 탈-성장 담론들의 기획과 과제 다시 질문하기

김상현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발전과 경제를 관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페미니즘과 도시공동체경제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1. 리부트된 페미니즘은 경제의 틀을 변혁하는가?

페미니즘의 의제들이 붓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법동영상 아웃, 성폭력 폭로전, 낙태죄 폐지, 4비 운동(비섹스·비연애·비혼·비출산), 탈코르셋에서 ‘경력단절’, ‘임금격차’, ‘유리천장 깨뜨리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의제들은 뜨겁게 토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젠더 이분법과 신자유주의 경제를 변혁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젠더 이분법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떠받들고 있는 물질적 토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리천장 깨뜨리기’, ‘정상’, ‘성공’, ‘야망보지 힘주기 프로젝트(야보힘)¹⁾와 같은 소위 젠더 정의의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나 다국적 가사노동자의 문제 등은 전면화 되지 못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쟁취하는 신자유주의적 성취의 원리 자체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흐름도 미약하다.

그러나 성급히 페미니스트를 ‘이기적인 여성 집단’으로 내몰거나 신자유주의의 변종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문제다.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거금을 후원하고, 여성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이용하며 서로의 성공을 위해 정보를 나누는 등 여성들과의 연대 의지도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발표에서는 현재 페미니스트들이 수행하는 공동체적 실천이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위계적 젠더 이분법이나 노동 분업의 틀을 변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을 위한 이론과 관점: 젠더 정의와 관계의 사실성

1) 이러한 분석을 위해 발표자가 취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젠더 정의는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가 지적하듯 젠더 이분법에 기초한 여성혐오나 성차별은 문화를 넘어 경제와 정치 체제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현상을 지속시키는 정치경제의 변혁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정치경제의 페미니스트 변혁적 비전은 상호의존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상호의존성은 독립적 개인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 주디스 버틀러를 참고하자면 인간은 처음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취약함이다.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는 한 인간은 타자에게 취약하다. 그것은 존재의 조건이다. 타자와 함께, 타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이타성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취약하기 때문이다. 타자와 함께인 것은 나의 존재조건이자 윤리이다.

3) 따라서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은 독립된 개인이 아닌 취약한 존재들의 관계를 고려하는 데서 출발

1) 야망보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론가마다 다른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다음의 글에 따르면 “비섹스/(이성애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비연애/비출산/비혼/비소비/비돌비(비혼은 돕는다 비혼을)’의 6가지 규칙으로 대표되는 야보힘프로젝트는 우선 옷이나 화장품 등의 ‘코르셋’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비를 일체 중단하면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를 요구한다.” 『블로그 연희관 015B』(2019.03. 26).

할 수밖에 없다.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이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친밀관계로부터 발전시켜 또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명명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남성중심적 자본주의적 정치경제학에서 삭제되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가 아닌 공동체로서의 경제 관계,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비자본주의적 경제관계는 그동안 주류 경제학에서 삭제되어왔다.

4) 관계를 고려하는 페미니즘 정치경제는 성장이나 발전보다 배려를 경제의 원리로 삼는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서로 잘 살 수 있기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 김슨-그레엄이 제안한 포스트자본주의적 정치란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이다.

3. 저성장의 시대에 대응하는 페미니즘의 자세들: 페미니즘 도시공동체의 세 가지 경향들

이러한 이론적인 관점 하에 최근 페미니즘 흐름에서 나타나는 연대와 공동체의 주장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첫 번째 흐름은 김진아 식의 성공(야망) 담론에 기반한 여성들의 연대이다. 이 흐름에서는 자기 계발적 주체의 성취 욕망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성공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욕망과 야심을 금지당했던 여성성에 대한 반역이라는 점에서 해방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경쟁을 중심으로하는 메리토크라시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파이를 정의롭게 분배하는 경제변혁을 말하는 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발표자는 정치경제의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바꾸려는 전략은 충분히 변혁적이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2) 두 번째 흐름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함께 활성화된 다양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협동조합 활동이다. 경력단절 과학전공자 여성들이 만든 온과학교육문화협동조합, 짧은 근속과 재취업이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자 여성 IT전문가들이 만든 굿잡마마협동조합,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든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등은 분명 기존의 정치경제의 틀에서 벗어난 정치경제를 기획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유연한 노동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 내에서의 여성노동 유연화는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을 상수로 놓는 것을 바꾸어 내지 못한다.

3) 마지막으로 비혼여성을 위한 비비협동조합, 살림의료사회적협동조합, 여성농민 사회적 기업 가배울, 페미니즘카페 협동조합 두잉 등이 있다. 발표자는 이를 관계적 자아에 기반하여 정치경제의 틀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로 본다. 이들은 정치경제의 물적 기반의 변혁과 함께 젠더 체제의 변혁까지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그러나 성장 대신 관계를 선택하는 페미니즘 공동체경제의 시도는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대면활동을 주로 했던 페미니즘 카페 두잉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 지속이 불가능해 보인다. 경제가 윤리적 행위일 수만은 없다는 점,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탈성장의 가능성과 방향성

장대업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최근 코로나 위기는 기후위기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성장주의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은 직접적으로, 혹은 기후변화를 통해 지구상의 존재하는 많은 동물 종의 자연 서식지를 파괴해왔고 성장주의는 이러한 파괴행위를 간단하게 발전이라는 말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자본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에 몰두하는 한, 개발이 인수공통 감염을 막아왔던 복잡한 생태계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 한 이 문제는 지속될 것이기에 코로나 위기는 글로벌 탈성장의 조건을 형성한다. 글로벌 탈성장에 대한 논의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탈성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19세기에 들어 고착화된 성장이라는 발전사상의 정설은 서구에서 먼저 폭발적인 생산과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정설을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 수용해서 실천해온 것은 20세기의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였기 때문이다.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을 볼 때 동아시아는 현재 세계총생산의 약 32%를 생산함으로써 전통적 선진경제권과 경제규모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성장의 대륙이다.

탈성장은 민주적으로 전개되는 생산과 소비의 재분배적 감소를 주장함으로써 성장담론을 공격한다. 생산과 소비의 감소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장기적인 탈성장 기획의 방향성이라면 재분배는 이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 운동은 인간의 성장 그 자체에 발전의 지향점 자리를 내어준 웰빙을 이상향으로 설정하며 성장담론과는 정반대로 웰빙의 복수성을 인정한다 (Chiengkul 2018, D'Alisa et al. 2014, Demaria et al. 2013, Kothari et al. 2014). 하지만 어떤 탈성장과 같은 흐름이 전지구적으로 요청되는 조건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탈성장이 지구적 운동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탈성장(degrowth)이라는 개념이 발전, 성장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북반구 출신 담론이며(Kothari et al. 2014: 368) 획일적 글로벌 탈성장 프로젝트는 획일적 발전 프로젝트의 반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담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지구를 위협할 만큼 성장한 곳에서의 대안적 슬로건으로 적합한 탈성장은 “저성장” 사회의 시민대중에게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성장이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비논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Chiengkul 2018).

담론적인 차원에서 탈성장이라는 개념이 가진 문제는 북반구의 탈성장 운동을 지역의 전통과 조건에 기반하여 성장지양의 형태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웰빙대안 (various well-being alternatives, Kothari 2014: 370)중 하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극복가능하다. 즉, 기존의 발전을 사고하던 것처럼 하나의 근거 개념으로서 탈성장을 위치시키고 그것의 로컬형태, 혹은 인류학적 형태로서 비서구지역의 탈성장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메리카의 Buen Vivir, 아프리카의 Ubuntu, 인도의 Swaraj와 같은 움직임, 그리고 이들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자본에 대한 반대, 사회정의의 추구, 자연과의 공존, 직접민주주의등의 원칙을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 웰빙에 대한 접근들을 복수의 대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탈성장운동의 이러한 담론적 대안은 곧 실천적인 대안과 연결된다. 적어도 아직까지 서구의 탈성장운동의 전개는 “발전”과 “성장”이 그동안 해온 실천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구에서 탄생한 개념을 다른 곳에 이식하는 실천이 아니라 반대로 탈성장의 동력

을 “저성장” 사회의 이름 붙여지지 않은 다양한 실천방식으로부터 찾고,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미래를 배운다는 인식이 명백히 존재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발전에 대한 담론적 이해와 담론적 보이콧에 그쳐왔던 서구의 “포스트”학자들의 탈발전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력과 실천력을 탈성장운동에 붙여넣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여전히 많은 장애물에 부딪힌다. 유럽 등 전통 자본주의지역의 경우와 달리 아시아에서는 성장주의를 통해 부상했고 여전히 발전국가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 선진국들이 탈발전을 상상하는 작업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발전국가로 포장된 동아시아의 발전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유력한 발전모델로 집요하게 권유되고 있으며 성장만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경로라는 단수적 발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성장중심주의의 수출은 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사회관계의 수출도 동반한다. 아시아의 선진자본주가 아시아의 탈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아시아의 탈성장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발전이라는 사회적 과정이 공동체들이 삶을 개선해나가는 다양한 경로들을 하나의 과정, 즉 경제성장으로 강제적으로 단수화시킨 과정임을 상기한다면 그러한 발전이후 웰빙추구의 다양한 방식을 상실한 사회에 대해 그 과정을 채 온전히 경험하지 않은 공동체가 탈성장의 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아시아에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자본에 대한 반대, 사회정의의 추구, 자연과의 공존, 직접민주주의 등의 원칙을 공유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웰빙에 대한 대안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변화로서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필요의 충족, 목표소득을 위한 노동, 자연과의 공존 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들 역시 많은 성장의 모순들을 경험하고 있다. 발전대안 피다는 캄보디아에서 성장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들에 대해 2018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이들 공동체의 경험은 성장위주의 발전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성장주의 이전의 인간웰빙의 조건들도 보여줌으로써 이른바 “저성장” 지역의 경험이 어떻게 아시아의 탈발전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시사해준다. 이들 공동체의 경험들은 아시아에서 탈성장을 상상함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자 출발점이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성장이전 인간웰빙에 대한 접근은 끊임없이 발굴, 연구, 육성되어야 하지만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지역의 국가들은 그러한 의지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성장주의와 발전국가신화의 전파에 동원되는 한국 등 동아시아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국제개발협력이 역으로 성장이전 인간웰빙에 대한 접근을 “저성장”사회로부터 배워 획일화되고 단수화된 현재의 발전을 발전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수의 웰빙경로들로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은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탈성장 미래의 주요한 각축장이다.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1 부
10:00 ~ 12:00

일반세션 1
산업과 노동, 다시 읽기

회의실 2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 변화(2008-2018년): 미국, 일본, 독일과의 비교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조형제(울산대 사회과학부)

1) 문제제기

이 연구는 자동화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화란 인간의 노동을 기계 및 컴퓨터가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Cambridge Dictionary, 2020). 자동화의 동기로는 비용, 정확성, 품질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

■ 연구 질문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자동차산업을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그룹과 동일시하고자 한다. 현대차 그룹이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시장 점유율 70-80%).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고용 구조가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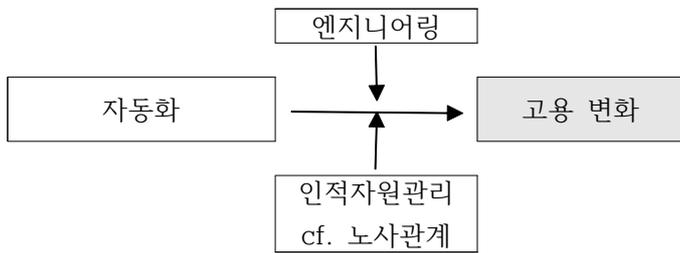
자동화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한편에서는 자동화에 따라 고용이 소멸한다는 급진적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앤드루 양, 2019).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상쇄 효과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Acemoglu and Restrepo, 2020). 자동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One best way)은 없다. 각국별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이 가능하다.

2) 분석틀/연구 방법

■ 분석틀

자동화 기술 변화는 고용 구조 변화의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이다. 특정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는 해당 사회의 구조적 조건에 따라 구체화된다(Krzywdzinski, 2020). 자동화에 따른 고용 구조의 변화는 여러 변수 중에서도 해당 산업의 엔지니어링 전략(기술중심적, 조직중심적), 인적자원관리 방식(통합적, 분절적)을 매개 변수로 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기업 또는 산업 차원에서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작동한다.

<그림 1>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 분석틀



<표 1> 자동차산업의 고용과 노동 :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분석틀

		엔지니어링(제품/생산)	
		조직 중심	기술 중심
인적자원관리	통합적	일본	독일
	분절적	미국	한국

기술 중심 엔지니어링 : 적극적 기술 투자를 통한 유연성 실현

조직 중심 엔지니어링 :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유연성 실현

통합적 인적자원관리 : 체계적 숙련형성, 생산직 노동자와 엔지니어의 인사관리를 연계

분절적 인적자원관리 : 숙련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분절화(내부·외부), 생산직 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엔지니어 인사관리의 단절

■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입수한 후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와 표준직업분류(6/7차)를 교차하여 자동차산업(완성차/자동차부품)의 고용 구조 변화(2008-2018)를 분석했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 독일 자동차산업의 고용 통계 자료를 분석한 Krzywdzinski(2020)의 논문과 비교하여 한국 고용 구조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지역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사례

조효래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1. 연구목적과 분석 틀

이 연구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사례를 통해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분석한다. 지역노동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추구했고, 이러한 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먼저, 노동조합은 단일한 행위자라기보다 내적으로 분화된 복합적 행위자이다. 둘째,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나 연대의 양상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지역적으로 특수하다. 1987년 이후 창원·마산지역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노조 리더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조의 정체성과 리더십의 가치지향, 조합원 구성의 변화, 정파적 균열과 갈등 등 노조 내부적 요인이 중요하다. 셋째, 노조의 지역사회 개입 형태와 전략은 외부행위자들의 태도나 권력 관계 변화를 포함하는 역사적 국면에 따라 달라진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고용위기,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과 같은 심각한 외부 위협이나, 선거를 통한 중앙 및 지방정부 교체와 같은 정치적 기회 역시 노조의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정책적 개입을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사관계 개입방식, 지역사회에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시민사회 연대에 기반한 정치적 동원과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교환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정치적 교환의 성격은 노조가 지지하는 진보정당의 영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활동과 전략

2020년 현재 민주노총 경남본부에는 16개 산별 연맹 66,207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가장 큰 조직은 금속노조로 22,247명이다. 지역노동운동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전략은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한 ‘동원’으로부터, 점차 정책적 개입을 위한 정치적 ‘교환’으로 이동해왔다. 이는 노조가 직면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의 ‘위협’, 지역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 구조조정에 맞선 전국적 총파업 투쟁이나 대정부 투쟁을 집행하는 것으로부터, 2000년대 중반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경남본부의 사업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민주당 지방정부의 우호적 태도에 힘입어 지방정부와의 대화와 협력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산별 연맹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하연맹들 사이에 지배적 정파 및 지도자들의 정치적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산별노조 지역조직들 사이의 관계, 사업과정에서 협력과 갈등은 기본적으로 정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파 간 균열과 경쟁은 조직화 사업에서 원활한 협력을 방해하기도 하고 산하연맹들의 관할권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분화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에 전략적 선택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는 정책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정책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나 지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동원 네트워크의 성격을 띠었다. 경남본

부의 시민사회 연대는 초기 민중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탄압에 대항하는 '전위적 연합', '임시연합'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단일의제를 중심으로 공동대처하는 '지지 연합',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국면에서 '상호지지 연합'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지방정부와 의회를 압박하는 방식이 지역사회 개입의 주된 사업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노동조합의 시민사회 연대는 민주노동당을 매개로 한 연대와 협력,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연대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노동조합은 '배타적 지지' 방침에 따라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치 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나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열 이후, 진보정당을 매개로 노조 활동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망은 크게 약화되었다. 진보정당의 정치적 분열은 노조 간부들의 정파 갈등을 심화시켰다. 정파 갈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은 정치 활동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확산시키고, 조합 간부의 진보 정당 참여를 위축시켰다.

지역사회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 반대하는 총파업투쟁에서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동원'으로부터, 점차 미조직·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적 개입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교환'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환경의 변화,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과 심각한 고용위기의 '위협', 지방자치 확대 및 촛불혁명 이후 지역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이 변화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정체성과 리더십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시민사회 및 진보정당과의 '배태된 응집성'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교환의 양상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0~12년 김두관 도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시민사회 연대기구(배태성)와 민주노동당(응집성)을 통해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노정 교섭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8년 김경수 도정에서 진보정당은 정치적 존재감을 상실했고 노동조합은 시민사회 연대나 의회정치 어느 것을 통해서도 지방정부를 압박하기 어려웠다. 고용위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절박한 정책적 요구와 민주당 지방정부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노정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노조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남지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동원'으로부터 '정치적 교환'으로의 변화가 단선적으로 진행되거나 그 자체로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 연대 및 강한 진보정당이라는 '배태된 응집성'에 기반할 때만, 노동조합의 '정치적 교환'이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로 귀결될 수 있다. 동원'에서 '교환'으로의 변화 역시 단선적인 것이 아니며, 정치적 '동원' 없이 정치적 '교환'이 풍부한 내용을 담기는 어렵다. 사회연대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주도성이 높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의 조율과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도급 지위와 노동에의 보상 격차: 기업 간 지대의 이전과 지대의 공유 효과를 중심으로

노수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이 연구는 한국의 하도급 관계가 기업 간 임금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하도급 거래는 중소기업의 일반적 거래 형태로 곧잘 생각되며, 많은 선행연구는 그 거래 관계로부터 규정되는 기업의 하도급 지위를 기업 규모와 중첩되어 기업 간 임금 수준의 격차를 낳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었다. 하지만 하도급 지위 간 임금의 격차를 낳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한 생산성 격차로 환원되지 않는 기업 간 관계의 실질적 효과를 주장하는 선행연구에서는 하도급 관계에 따른 기업 간 비용 전가 메커니즘으로부터 기업 간 임금 격차가 나타난다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이러한 가설이 통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정한 기업 혹은 산업에 대한 사례 연구가 풍부한 데에 비하여 과연 이러한 설명이 하도급 거래 관계 전반, 혹은 적어도 제조업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결과로서의 임금 격차를 낳는 과정상에서의 수익 이전 혹은 비용 전가는 실증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비용 전가의 이론적 논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근래 하청 기업의 높은 이윤을 추이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하청 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추이는 기업 간 임금 격차를 뒷받침하는 수익 제약의 논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 연구에서는 하도급 지위에 따른 기업 간 지대 이전, 그리고 획득된 지대가 기업 내에서 노동에 공유되는 정도의 하도급 지위 간 차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부터 하도급 관계에 따른 기업 간 노동에 대한 보상 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비용 전가 논리는 기업 간 지대의 이전에 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선도기업이 더 많은 획득된 지대를 노동에 분배하는 것이 하도급 지위에 따라 기업 간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한 가지 원인이 된다. 그러나 기업 간 지대 획득의 차등성이 노동에 대한 지대 분배의 차등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하청기업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이 높은 이윤율과 대조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의 근거가 된다. 하청기업에서 노동 비용을 인하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동기는 하도급 지위에 따른 노동에 대한 지대 분배의 차등성과 연결되며, 이는 한국의 기업별 분절 노동시장, 보편화된 전속적 하도급 관계, 하도급 거래에서 단가 책정 방식 등의 제도적 맥락을 통해 형성, 작동한다. 선행연구의 비용 전가 논리의 근거에도 지대의 존재와 이전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경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다. 지대는 그 정의상 생산과 구별되지만 동시에 분배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하도급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기업 간 관계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차원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용이하다. 다만 지대를 그 자체로 측정하는 데에는 많은 난점이 따르며, 여기에서도 두 가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대의 이전과 공유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업 간 지대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지대가 존재할 때에 그 이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지대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독점적 하청 기업일수록 원청 기업과의 거래관계의 전속성이 노동에 대한 보상 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기업 간 지대의 이전이 하도급지위에 따른 노동의 보상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설적으로 하청 기업이 생산물시장으로부터 획득하는 지대가 클수록 원청과의 전속적 관계의 임금에 대한 부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이윤을 도구변수로 하여 기업의 지대 공유(rent-sharing) 성향을

산출, 비교하는 것을 통해 획득된 지대가 기업 내에서 노동에 분배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설적으로 하청의 노동에는 원청에 비하여 임금 절감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기업 수준에서 획득된 이윤이 노동에 분배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도급 지위 간 노동에 대한 보상 격차를 낚는 이러한 두 가지 지대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 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 하청기업이 지대를 많이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과점적 지위에 있을 때 원청기업과의 거래 비중 증가는 해당 하청기업의 1인당 인건비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하청 업체일수록 지대 공유의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적으로 하도급 지위 간 노동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제시된 기업 간 지대의 이전과 차등적 공유의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하청업체의 이윤 마진율이 일정하게 보장됨에도 하도급 지위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요컨대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의 인건비 상승이 제약되는 것과 별개로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으며, 하청 기업에서는 발생한 지대가 노동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원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1 부
10:00 ~ 12:00

일반세션 2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

회의실 3

한국 학교시민교육 교육과정.교과서는 민주공화국 형성자 육성에 적절한가?: 한국.프랑스.독일.스웨덴.핀란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원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1. 발표의 내용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p>I. 서론</p> <p>(1) 왜 민주공화국의 형성자 육성이냐</p> <p>(2) 주요국가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목표·등장배경</p> <p>II. 각 나라의 학교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p> <p>(1) 프랑스 중학교 ‘도덕·시민’ 과목 교육과정(2015)</p> <p>(2) 독일 중학교 ‘정치·경제’ 교육과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2019)</p> <p>(3) 스웨덴 ‘시민’ 과목 교육과정(2018)</p> <p>(4) 한국 ‘사회’ 과목 교육과정(2015)</p> <p>III. 각 나라의 학교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비교</p> <p>(1) 프랑스·독일·스웨덴·한국 중학교 시민교육 관련 과목 교육과정 상의 주요 내용 비교</p> <p>(2) 독일·스웨덴·한국 초등학교 고학년 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상의 과목 주요 내용 비교</p> <p>IV. 각 나라의 학교시민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 간단 비교</p> <p>(1) 교과서 목차 비교</p> <p>(2) 교과서 내용 비교</p> <p>V. 결론</p>

2. 각 국가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목표·등장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핀란드	독일	영국	한국
개념	지식과 실천, 학습과 태도가 연결된 시민정신을 지향하는 시민성 교육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	정치적 경제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에 정치적 교양을 형성하는 교육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 정치적 문해력 형성을 위한 교육	공동체를 유지하는 교육
목표	‘함께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한 다양한 사회, 정치적 실천으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성 함양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시민적 지식, 기술, 역량을 갖춘 성숙한 시민적 주체 형성	전쟁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의 고양	사람들이 스스로를 적극적인 시민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 형성.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
등장배경	1985년 이후 공교육 중요성이 재론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 담론 부활.	20세기 후반 복지국가 건설 과정에서 교육개혁 성취 및 지속적인 정책 혁신 단행	2차대전 이후 독일 국민 재교육을 통하여 독일을 탈냉전시대의 고민주주의의 가치를 마련	1990년대말 드러난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청소년폭력 증가	1997년 교육기본법 2조(교육이념)에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명시
주요특징	타인존중, 공화국의 가치습득 및 공유, 시민문화 구성	- 통합적 접근 - 실용적 접근 - 가치기반 접근	연방정치교육원, 주정부 정치교육원, 정당 등이 학교 정치교육 지원	2013년 이후 필수과목이던 민주시민교육은 선택 과목으로 전락	도덕과 사회과에서 민주 시민교육을 담당한다고 통상적으로 추측
	시민(civique)교육 과목	현상기반학습(PBL)	장기과정(politisch bildung)과목	시민성(citizenship) 과목	학문중심의 도덕과 사회과
주요과제	공화국 시민을 넘어 정치사회적 일상에서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참여 개념으로 확대	합의적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 통합적 관점에서 시민교육의 제도화	유럽통합, 이민자와 관련된 사회통합의 과제	정치교육과 인성교육 사이의 혼란. 정치적 문해력 내용 및 방법에 고민	학교 시민교육 교육과정 마련과 이를 책임지는 과목과 교사 육성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징

- 분과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라 드물게 삶의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사회적 구조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 관점에서 개인이 해결하는 하는 사례를 주로 제시함
-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하지 않으며 학습 결과물 발표가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지식의 양을 확인함
-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지도 논쟁하게 하지도 않음
-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형성하도록 촉발하는 현실의 생생한 자료의 교과서 게재를 허용하지 않음
- 한국 교과서는 학문적으로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당위성을 갖춘 논쟁을 피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치중
- 교과서들이 분과 학문의 주요 개념이나 용어, 주의 주장을 서술식으로 구성
-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들의 분량이 방대하지 않고, 탐구 과제로 찾아서 발표하도록 학생에게 책임 전가함
- 교과서의 수록자료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낼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 하지 못함
- 교과서가 백과사전식으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침

(2) 외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징

-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반권위주의 교육, 비판교육, 저항권교육, 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교육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함. 아래는 교과서 질문 예시임
 - 그들은 무엇에 저항하고자 했는가?
 - 권리에 대한 이 오랜 투쟁의 주된 수혜자들은 누구인가?
 - 누구를 위하여 평등은 계속 향상되어야 하는가?
 - 어떤 방식으로 보다 평등한 치료를 만들어야 할까? 그것은 어떤 한계에 직면하는가?
 - 특히 치료에서 배제되는 집단은 누구인가?
 - 기존 질서를 흔들도록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제시하시오.
- 시사성이 매우 높은 학습 자료들을 교재로 활용 프랑스 학교에서는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실업으로 인한 문제, 시사성 높은 자료(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사용
- 시사문제의 포함을 둘러싼 이와 같은 딜레마에 대해서는 시사문제를 토론 수업에 포함시킨다. 토론 수업에 다루어질 시사문제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주제와 시민성과 관련되어서 구체적 사례로 활용 가능한 주제를 선정한다.
- 사건에 대한 상이하고 대립된 해석을 찾아내고 분석한다. 어떤 특정한 사실이 밝혀지는가? 혹은 은폐되는가? 어떤 주장, 어떤 논리가 선택 혹은 무시되는가? 사건의 묘사 및 정의에 있어서 어떤 단어가 선택되어지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담론을 분석한다.
- 학생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사회적 소속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이 학교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 공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그리고 시민으로서 자신의 참여(양가주망)를 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강조한다.(2018 교육부 공보 Bulletin Officiel n° 30)

4. 결론에서는 다음 내용들이 주장될 것입니다.

- ‘시민교육’ 과목이 모든 교과목의 민주시민교육의 ‘중핵과목’ 이 되도록 ‘공통필수과목’ 으로 설치
- 시민교육 교육과정 내용은 삶의 문제를 다루고 대강화하며 , 교과서는 자유발행제
- 교과서는 통합적(holistic), 실용적(pragmatic), 가치 기반(value-based) 접근 방식으로 개발
- 범교과 학습주제(agenda)들이 시민교육 과목에 통합되어야 시민교육 관점에서 교수·학습되어야 함
- 시민교육 평가는 국가 수준의 평가해야 함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 한국 학교민주시민교육 이대로 좋은가?1)

오유석
상지대학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핀란드, 독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4개의 사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배경 및 맥락,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원칙을 살펴보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프랑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근대교육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프랑스 학교교육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18세기 계몽주의에 의해 확산된 인권과 평등 개념은 대혁명을 거쳐 3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그것을 구현하는 제도로서 보편교육과 긴밀히 결부되어 논의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의 공교육은 ‘교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공화주의적 전통 위에 수립되었고 학교교육의 목표는 ‘공화국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 밖 시민교육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학교 시민교육’이며 프랑스 교육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시민성은 근대사회 기반이 되는 정신이자 가치로서 공화국의 작동 원리이고 공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민교육은 ‘비판적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며, ‘참여적 시민성’을 강조한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첫째, 타인존중, 공화주의적 가치의 습득과 공유, 시민문화 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닌다. 둘째, 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들은 주제와 내용으로 EMC의 전 과정에 스며들어 있으며, 이 가치들을 연결해주는 것이 핵심 문서인데, 라이시테 헌장, 인권선언문, 헌법서문이 그것이다. 셋째,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적 내용구성’이 특징이며, EMC는 그 자체로 주제와 주제, 주제와 단원의 사이클을 넘나들며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넷째, 가치, 지식, 실천 중 실천에 중심 추를 둔 ‘참여적 시민성’을 추구한다. 다섯째, 교과서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설명이 적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스스로 해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섯째, 프랑스 시민교육은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핀란드

핀란드의 시민교육은 19세기 중반 그룬트비(N.F.S. Grundtvig, 1783-1872)가 주도한 덴마크의 민중 혹은 평민 대학(folkehøjskole) 운동에서 시작하여, 19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핵심 제도이자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참여 민주주의적 운영 원리에 기반한 학습 동아리는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학습, 실천하는 요람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도 현대 사회의 복잡다기한 이슈와 변화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는 첫째, 학교 교과과정에서 별도의 시민교육 과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회과목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에서 현대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

1) 이 발표문은 2018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해외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연구(NRF-2018S1A5B8A02081350)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연구책임자: 오유석, 공동연구원, 김세희, 서현수, 이인선, 김원석, 정하운, 김원태.

가치와 이념에 바탕을 둔 통합적, 실용적 관점의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종합학교 사회과목 내용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다양성과 평등, 시민권과 책임, 복지국가와 조세, 국가경제와 노동시장 정책 등의 주제와 영역이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되고 있다. 셋째, 학교 수업 과제와 평가는 대부분 서술형 과제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들이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며 숙고된 판단과 의견 제시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넷째, 핀란드 학교 내 시민교육 시스템과 문화는 핀란드 근현대 정치사의 전개과정과 맞물려 진행된 근대 공교육의 발전과 개혁으로부터 오랜 시간 빚어진 결실이다. 다섯째, 학생들은 다양한 공간과 채널을 활용해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육문제가 내적, 구조적 차원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

독일은 이전 바이마르 시대 ‘공민교육’이나 바이마르 헌법 등 민주주의적인 전통이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2차 대전 이후 전승국에 의해 시작되었다. 독일에서는 ‘시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반적으로 ‘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70년대 좌파와 우파 간 정치교육 원칙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오늘날까지 독일 정치교육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 2000년대 이후 독일 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 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유럽통합과 이민자문제와 관련된 사회통합 문제, 미래 산업사회를 준비하는 문제가 정치교육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독일의 학교 시민교육은 첫째, 기본적으로 진도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식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둘째, 교과서의 경우 한 단원이 대부분 ‘사례’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학습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셋째, 정치교육이 사회 교과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지리 등 연계 수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넷째, 교과목 학습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민주주의 배움이 이루어진다. 학생 대표는 학교 운영 전반을 협의하는 하나의 주체이자 실제 참여가 보장된다.

영국

영국 학교에서는 시민교육을 별도의 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영국 학교 시민교육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자율과 참여이다. 학교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민주주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중요한 교육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없이 공유되고 있다.

영국에서 학교 시민교육은 ‘자율’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다. 학교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자율성을 갖는다. 국가 교육과정은 시민교육에 대한 대강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 적용은 개별 학교에 달려 있다. 교사는 교과서를 비롯하여 각종 학습도구를 선정하고 활용하는데 전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자율과 더불어 ‘참여’가 강조된다. 영국의 학교 시민교육은 자율성에 대한 존중 위에서 정치적 참여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크릭보고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 사회에 참여하며, 정치적 지식과 행동을 바탕으로 사회변화를 꾀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 정치참여를 강조한다. 교과서 역시 학습자의 민주적 행위/참여능력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학교에서 진정한 시민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율과 참여의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노동교육의 현주소

박인혜
성공회대학교

인류의 역사발전은 노동의 역사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을 폄훼하는 왜곡된 인식을 노동존중적 인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라 할 것이다. 교육적 의미란 왜곡된 노동 인식을 바로잡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성 함양 중심의 가치교육”이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63)로 ‘노동존중 사회실현-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를 제시하고 교육부가 ‘교육정책추진과제(50-1-4)로 ’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교육부, 2017.7)를 수립한 배경이다.

따라서 학교 노동인권교육은 넓은 의미의 노동교육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학교 노동교육이라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교육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란 용어가 정착한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인권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2015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노동인권’ 과 관련된 성취기준과 내용요소가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인권’ 과 관련된 교과는 사회교과에 치중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 국가와 차이를 보인다. 즉,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은 시민교육, 지리, 역사, 경제, 사회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노동 및 노동자와 관련된 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노동인권교육의 목적이 개별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즉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해외 국가들은 시민으로서 노동을 통해 자아 및 건강한 삶의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목표의 재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노동인권교육의 실시현황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이 교사의 자발성에 의존,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교재나 콘텐츠의 부족 그리고 교육부의 역할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6개 영역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노동인권교육의 목표는 동일하다. 즉, 노동인권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노동을 존중하는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 내용도 단지 진로선택 및 근로기준법 교육이 아닌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자의 인권, 현실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의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등 추진체계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은 직업교육, 진로교육, 경제교육 등의 관련법들이 있을 뿐 단일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비록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가칭)「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기 교육과정 내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인권’ 관련 교과인 도덕과 사

회 교과에서 직접적인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 등 다양한 교과에서 노동인권 관련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교과서, 교사, 그리고 학생으로 이어지는 수업 상황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체계적인 심화 학습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 전문성 함양 방안이 필요하다. 즉, 일반교원이 노동인권교육에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원양성과정과 교원연수과정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가르쳐지기 이전에 교육 실천의 몫은 교사에게 있다.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학습 자료를 연계해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노동인권교육은 교육부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해야 한다. 현재 분산, 중복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화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협력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노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삶과 연계된 노동 행위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 ‘노동의 역사’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먼저 제시되고 권리 측면과 노동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시사적이고 현실의 노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때 교수학습방법은 토의·토론학습, 체험학습, 영상학습, 독서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자기 생각을 수정해 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통해 노동 관련 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학습 동기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이 존재한다. 교육부는 언제든지 접근이 수월한 콘텐츠 개발과 교사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학교 현장의 노동인권교육의 내용과 과정,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현장조사와 교사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2 부
13:30 ~ 15:30

기획세션 3
사회과학과 성장 패러다임

회의실 4

신고전파경제학 패러다임 비판과 생태경제학의 가능성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교의는 도저히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상품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것들에 사적소유권을 부여하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터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 자연을 잘라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입장은 '자유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원성(plurality)과 공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두께는 사라지고 인간들은 평면위에 고립된 점들로 나타난다. 비용과 편익, 고통과 쾌락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원자(atom)들로 간주된다.

이러한 허약하고 평면적인 이론은 수학적 기법을 통해 정교화되어 왔지만 이론적 전제의 부당함에 의해 갈수록 현실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세계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고 상정된 인간들에 의한 한계비용(marginal cost)과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의 계산 위해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신고전파경제학의 한계는 근대적 '과학'의 한계이기도 하다. 과학은 그 자체로 언어적 실천이다. 인간 주체들의 불안정성(unstability)과 관계들의 중층성(multiplicity), 자연과 사회의 불확실한(uncertain) 상호작용이 과학이 대결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과학은 언제나 유동하는 복잡한(complex) 대상을 불완전한 언어를 매개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근대적 과학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하고', '수량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을 측정하고', 근대적 자유주의가 열어젖힌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환원주의에 경도되어,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을 단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 신고전파경제학에는 이러한 '독단'이 응축되어 있다. 신고전파경제학이 전제로 한 공리주의적 인간관 뿐만 아니라 선형적 시간관도 문제다. 경제학적 논리는 시간을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간마저도 단위로 쪼개어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부피가 있고 주름이 있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공간마저도 평면적으로 이해한다. 신고전파경제학의 한계는 '인간', '시간', '공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적 근거들에 의해 비판될 수 있는 것이다.

신고전파경제학은 규범적 차원에서도 비판될 수 있다. 신고전파경제학마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시대의 보편적 이념이 경제학적 원리와 어떻게 어긋나는지 논증할 수 있다. 규범적 비판은 경제학적 논리가 우리 시대가 도달한 합의인 인권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념과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사실적 비판과 규범적 비판은 경제학적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신고전파경제학이 위험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재가 가지는 불확실성(uncertainty)와 다중성(multiplicity)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과 다중성, 즉 실재의 복잡성(complexity)을 받아들인다면 정당성을 가진 관점은 여러 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관념적 전제를 버리고 다양한 입장에서 인식하는 다양한 가치판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과학적 지식은 중립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standpoints)로부터의 현실 인식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논의됨으로 도달하게 되는 잠정적 합의(provisional consensus)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불확실성, 복잡성을 수용하고 열역학법칙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신고전파 경제학은 현실설명력을 잃게 된다. 공진화의 과정에서 우발성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들은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에 근거한 속의(deliberation) 제도에 의해서만 지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뒤집으면 과학적 실천은 평면에서 점을 찾아 직선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는 단순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process)이 과학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핵심으로 대두된다. 과학적 실천은 '문제 해결 과정'(problem-solving process)인 것이다. 문제 해결 과정은 과학적 논의와 그 결과로서의 정책 결정을 포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확장된 참여의 여지가 주어진다. 상이한 가치 판단에 따른 다양한 견해들이 반영된다면 문제해결 과정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의 질을 보증할 수 있게 된다. 과학의 역할은 포기되지 않고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연적 체계의 불확실성"과 "인간 가치의 관련성"의 맥락에서 다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류경제학 패러다임의 비판은 생태경제학으로의 길을 열어 놓는다. 다양한 형태의 지표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경제학적 기법인 다중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에게 여러 대안적 가능성을 숙의할 수 있게 한다. 다중기준 분석은 신고전파 경제학처럼 깔끔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갈등적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고 다양한 입장들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는 대화의 맥락(context of dialogue)에서 의미를 얻게 된다. 경제 정책은 전문가들에 의해 확정되어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거버넌스를 거치면서 신뢰와 객관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중기준 분석은 약한 비교가능성(weak comparability)을 옹호한다. 생태경제학은 공진화와 열역학법칙에 따라 인간만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경제학의 고려 대상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조건 아래서 가치평가와 경제학적 논의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서로 겹쳐지는 다양한 관점을 되돌려 주었다. 우리는 단지 효용을 계산하는 기계이기를 멈추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자신의 다양한 목소리를 돌려받은 사람들이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 경제적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정은 언제나 “확장된 동료 공동체”(extended peer community)의 토론을 거쳐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지금 당장의 이익과 이윤을 넘어 장기적 안목에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정책 결정과정이 동료공동체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라면 경제학은 정치로부터 분리된 중립적 과정이기를 멈춘다. 경제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을 띠며 경제적 정책 결정은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립적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언제나 타협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서로 갈등하는 가치들을 중재할 중립적 입장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전파적 주류경제학과 비교해 생태경제학이 가지는 강점은 생태위기와 사회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로 고립된 행위자의 효용 최대화의 기준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두터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생태경제학의 강점은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 반쪽자리에 머물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분배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한 생태경제학적 주장이 대중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권을 가진 국가간의 정치세력과 다수 대중(시민) 양쪽에 충분한 호소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공식적 정치의 장과 비공식적 시민영역 모두에서 공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생태경제학의 주장이 현재 존재하는 협소한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제도적 틀 안에 생각을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협동의 관점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논리는 지탱하기 어렵다. 생태경제학은 이러한 한계 지점을 넘어 인권, 지속가능성, 연대/협동의 원리를 실현시키려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제도는 생태경제학을 주변부로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경제학은 역설적이게도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데올로기적 영향권 안에 있는 것만이 ‘현실적’이라는 타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인간 삶과 자연생태계 사이의 균형이라는 실재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대의민주주의라는 현실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대의민주주의의 현실에 갇혀 있으면 인간 삶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깨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사람들의 의식, 습관, 행동은 전자의 현실에 잠겨 있지 않은가? 인간 삶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류적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 균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안의 경쟁적 행위자로 행동해야만 하고 대의 민주주의라는 협소한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러한 딜레마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 생태경제학의 ‘이론적’ 함의는 이론은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가치들과 관점들을 포괄할 때만 현실 개입의 힘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장자본주의와 협소한 대의민주주의라는 지배적 질서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제도와 인권과 지속가능성, 협동/연대의 원리 사이의 균열은 사람들의 몸을 통해 떨림, 어긋남으로 체험된다. 그런 떨림과 어긋남들은 사회적, 기술적 잠김 효과를 이완시킨다. 그러한 이완이 과학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융합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개입 또는 리더십과 만날 때 기존 질서 안에서도 확장된 동료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잠김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

파슨스 사회학에서 경제학과의 경계 만들기

박치현
대구대학교

본고에서는 파슨스 사회학에서 경제와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여, 주로 체계 이론 구상 이후의 경제와 사회의 통합 작업을 주로 다룬다. 파슨스 사회학은 세계대전과 대공황(1930년대)으로 인한 서구 주류 자유주의 및 자유주의 경제학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사회학과 사회 개념의 지성사적 위치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하면서 탄생했다(박치현, 2015). 이 때 파슨스는 특히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 식으로부터 사회학 이론의 재구성을 시작했다.

1.

파슨스는 처음에는 베블런에서 연원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의 영향 속에 있었으나, 영국과 독일 유학 이후 한계효용학파에서 연원한 '신고전파 경제학'과 '독일 사회경제학', 그리고 베버 사회학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박사논문을 위해 쾰바르트와 베버의 자본주의 개념을 탐구하면서, 파슨스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격,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 등을 수용한다(Parsons, 1991:3-37). 신고전파에서는 일반이론(general theory) 구축('개념도식'의 중요성)과 '목적-수단 도식', '인간 행위' 개념을 수용한다. 그는 영국의 알프레드 마셜이 경제적 조건이 인간 성격에 미치는 영향 같은 윤리적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 이탈리아의 파레토가 인간 행위를 논리적/비논리적 행위로 구분한 점에 주목하였고, 베버의 행위유형론에도 주목했다(Parsons, 1937).

파슨스는 제도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 양자를 검토하면서, 전자에 대해서는 경험주의에 빠져들고 방법론적 일반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실증주의에 따라 개인주의와 원자론에 빠져들며 목적의 우연성을 무시하여 사회질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파슨스의 전반기 사회학이론은 당시 경제학의 양대 흐름을 비판하되 양대 흐름이 모두 자체적으로 '내적 모순'에 부딪혔음을 지적하는 등, 경제학 패러다임의 내파를 보여주면서 사회학의 독특성과 변별점을 포착하고자 했다.

파슨스의 초기 대표 저작인 『사회적 행위의 구조(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1937년)』는 이러한 논의를 '자원적 행위이론'을 통해 완성한다. 이 책은 당시 유럽과 미국 지성사를 지배하던 '공리주의 패러다임'을 해체하는 위업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이론적 모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렴테제'를 제시하여 유럽 사회과학이 사회학적인 사유로 수렴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학 이론을 해체하되 뒤르켐, 베버의 사회학을 도입해 재구성한 '단위행위(unit act)' 모델을 보편적 사회 이해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단위행위 모델은 사회적인 것의 창발성(emergent properties)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구체적 개인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이론적으로 추상화된 분석적 실재로서, 목표, 상황(수단, 조건), 규범, 노력으로 구성된다. 단위행위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파슨스는 목적의 무작위성(경험주의)과 질서의 카오스(상대주의)를 해결하면서 '사회적인 것'의 창발성(emergent properties)을 근거지었다. 각각의 단위행위들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연결되면서 점점 더 복잡한 행위체계를 형성하며, 개념적으로 고립된 각각의 단위행위와는 독립된, 즉 단순한 부분의 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창발적 속성이 생겨난다. 파슨스는 결국 이 지점에서 사회적인 것과 사회의 자리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슨스는 유럽 사회사상이 자신의 '자원적 행위이론'으로 수렴된다는 '수렴테제'를 제출한다.

파슨스는 이와 같은 사회 개념을 통해 사회학과 여타 사회과학의 경계를 구획하고자 한다. '공통의 가치 통합'에 기반한 사회적 행위체계의 창발적(emergent) 속성이 '경제적인 것' 및 '정치적인 것'과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속성에 입각해 사회적인 것과 사회학의 위치를 규정하고자 한다(SSA 768). 이러한 논리에 따라 그는 사회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체계들이 **공통의 가치통합이라는 속성에 의거**해 이해되는 한에서, 사회적¹⁾ 행위체계들에 대한 분석적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시도하는 과학이다.(SSA : 768)

이러한 규정에 따라 파슨스는 단위행위의 연계에 의해 가능해지는 창발성(emergent properties)의 각각의 3가지 층위를 다루는 과학이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3가지 사회과학이라고 규정한다. 각각은 경제적 합리성(경제학), 정치적(강제적) 합리성(정치학), 가치통합의 측면에 주목한다. 세 사회과학은 모두 사회적 행위체계를 다루는 분석적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단위행위'는 세 가지 분석적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기초이다.

파슨스는 AGIL 패러다임을 개발한 뒤, 이 패러다임을 토대로 초기의 관심사였던 경제학과 사회학의 관계에 대해 다시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주목하는 지점이다. 경제체계는 파슨스의 체계이론에서는 적응기능인 'A'(adaptation)에 해당한다. 당시는 뉴딜 시기로서 케인즈 경제학이 지배하던 때였다. 이 시기 대표작인 『경제와 사회:경제학과 사회학의 통합(*Economy and Society:A Study in the Intergration of Economic and social theory*;1956)』(이하 **ES**로 표기)는 케인즈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경제학이 더 이상 분리된 독자적인 사회과학이 아니며, 사회적 체계 이론(a general theory of social systems)의 하나의 케이스**라고 주장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파슨스는 **경제가 전체 사회의 하나의 분화된 하위체계이자,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사회적 체계**라고 주장한다. 경제는 사회의 '적응'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의 하위체계이다. 경제는 전체 사회를 대표하여 '생산(production)'을 통해 물질적 자원을 주어진 목적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적응 문제를 다룬다. 경제는 사회의 적응 기능의 우선성(primacy)으로 인해 전체 사회로부터 '분화(differentiation, 分化)'되며, 경제체계는 가치 문제(L), 통합 문제(I), 목적달성 문제(G) 등의 기능적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파슨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시각은, 기존에 시장과 사회(국가나 시민사회)를 별도의 분리된 영역으로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으로 묘사하는 시각(그라노베터의 착근성, 폴라니의 시장의 식민화와 사회의 자기보호 등)과 달리, 경제의 '자율적' 작동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회적 체계들과의 '관계'(경계교환, 이중적 교환 등)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파슨스는 이러한 시각을 통해 제도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 양자를 자신의 사회학적 경제이론으로 지양 및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1)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복수의 행위자들이 서로의 행위를 상호적으로 지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SSA : 768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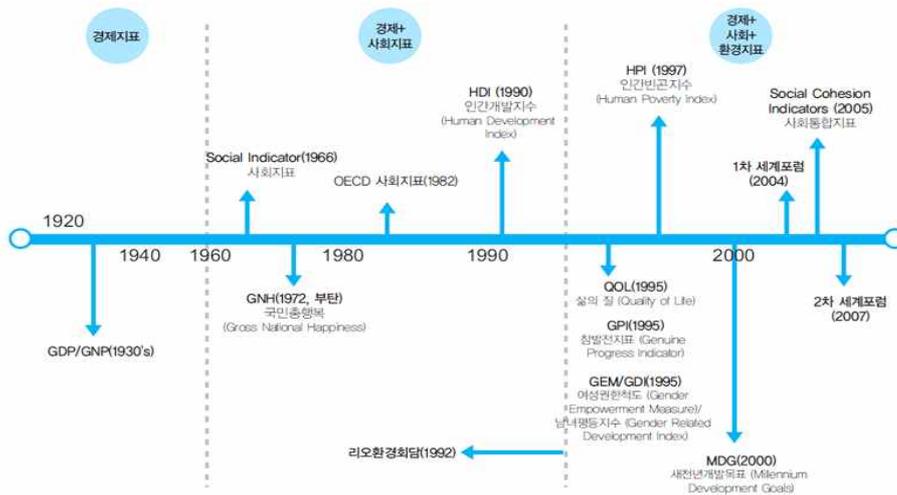
탈성장 시대의 성장지표: 한국의 발전지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논하는 데 있어 ‘발전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못지않게 ‘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논의의 핵심을 차지해왔다. 발전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만큼 발전을 측정하는 방식도 시공간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 이는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전의 지표’에 대한 변화이자 ‘지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림 1] 발전의 지표, 지표의 발전



출처: 통계청, 「OECD 세계포럼의 이해」 (2009)

1930년대 현대적 의미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개념이 개발된 이후, GDP는 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자 발전의 정도를 대리하는 지표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 사회운동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사회지표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경제중심-GDP 중심의 발전 사고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경제관련 지표 뿐 아니라 보건, 교육, 문화 등의 지표를 포괄하여 한 사회의 발전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환경보전 관련 담론은 기존의 경제/사회 발전을 경제/사회/환경 발전 지표체계로 확대·재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2000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거쳐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표체계를 통해 구현된 이래 현재진행형의 전 세계적 실천목표로 이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 사회 내에서도 발전 및 발전지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1957년 최초로 GDP를 측정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그리고 2018년부터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표체계¹⁾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의 발전목표에 조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와는 별도로 2010년대 초반부터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로 구성된 ‘국가지표체계(K-indicator)’ 서비스²⁾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발전 상황 및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그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 <http://ncsd.go.kr/> 참조

2) <https://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 참조

이와 같은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시점에서 한국의 발전지표 및 지표의 발전양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우선, 한국 발전지표의 비자생성에 대한 고민이다. 앞서 살펴본 한국 발전지표의 짧은 역사는 한국 사회 발전의 성격과 철학에 대한 고민은 결여된 채, 외부로부터의 발전 목표 및 지표의 수입으로만 점철되어 있다. 이는 전 세계적 발전사에 있어 늘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지위만을 점해왔던 한국 발전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제는 국제사회의 '선도자(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현시점에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한 사회의 독립적이지 독보적인 역량이며, 이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조직의 비판의식, 창조성, 성숙함이 조화로이 어우러질 때만 가능하다. 특정 사회의 발전 지표를 해당 사회가 보유한 발전 사고(development thinking)의 직간접적인 대리물이라 본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발전 사고의 핵심은 무엇인지, 무엇이 이러한 발전 사고를 가장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하향식(top-down) 지표체계 수립의 한계성이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대부분의 발전 지표체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발전 지표체계 역시 학계 및 관 중심의 하향식 수립체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발전지표의 비자생성 문제와 어우러져 발전지표의 활용가능성과 사회수용성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립한 발전 목표 및 지표체계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발전 지표체계 수립과정에서 국민참여마당 등을 개설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지표체계 작성 및 발전 목표 수립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와 시대정신이 적극적으로 녹아 들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지표의 사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의 발전지표 생산체제는 국제적, 외부적 유행에 따라 등장과 사양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오로지 지표생산을 위한 지표생산의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상기에 언급된 발전지표의 비자생성, 하향식 지표체계 수립과정의 한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생산된 지표의 실용성 및 활용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이상 향후 생산될 모든 발전지표 역시 유사한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발전지표와 국가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여 해당 지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있으며, 지표생산 단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생활단위로 낮추어 사회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일상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기 생산된 발전지표의 무기력한 사양을 방지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지표생산, 지표생산을 통한 사회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2 부
13:30 ~ 15:30

기획세션 4
탈-성장 시대의 '혐오주의'

회의실 1

협오의 종교와 광장의 정치: 종교정치의 공간과 성격 변화, 1970년대 ~ 현재¹⁾

이정연

서울여대 교양대학

얼마 전 정부는 10·3 개천절에 예정되어 있던 광화문광장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을 대거 동원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집단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광화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시위대를 원천봉쇄하면서 이러한 대처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최근 광화문광장에서는 3·1, 6·25, 8·15, 10·3 등 국가 기념일마다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광화문광장은 대중의 촛불정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민들은 부조리한 사안들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광화문광장은 보수단체의 집회 공간이 되기도 했다. 2000년대부터 열린 보수단체의 시청앞, 광화문광장 집회에서는 ‘공산주의’, ‘빨갱이’ 등의 노골적이고 과격한 정치적 발언과 함께 태극기, 성조기도 함께 등장했다. 그리고 이들 중심에 서서 현 정부에 대한 격한 비난과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핵심 세력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과 같은 종교단체가 있다. 1990년대부터 세력을 키워온 한기총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본격적인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2000년대 광화문집회의 중심세력이 되면서부터 시청앞과 광화문광장 집회에서는 각종 종교적 용어와 십자가,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했고 기도 소리와 찬송가도 울려 퍼졌다.

이들의 광장집회에는 기존의 집회와 달리 평범한 장노년층이 대거 밀집하고 있다. 특정 보수단체의 활동가나 정치세력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나와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파면, 구속이 이어지면서 더욱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도 이러한 집회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했다. 종교단체가 광장에서 주관하는 구국기도회, 국민기도회 등의 집회에는 어김없이 보수단체의 성원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한데 섞여서 집회를 열었다. 보수 정치집단과 태극기부대, 종교집단은 사실상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세력이 되어 광장에 집결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의 광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의 정치화’, ‘정치의 종교화’ 현상이다.

태극기집회의 광장정치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태극기집회를 특정한 이념으로써 규정하고 그 특성과 발현 배경을 설명하거나(채장수, 2018) 심리적, 감정적 차원에서 근대화의 불안, 특정 집단의 인정 투쟁, 참여자들의 감정 동학을 분석하거나(김왕배, 2017; 문성훈, 2018; 김진욱외, 2018) 동원의 메커니즘에 입각해서 설명하거나(장우영, 2018) 또한 광장의 집회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정연, 2017; 홍영용, 2020).

그러나 본 연구는 종교의 정치화, 정치의 종교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태극기집회를 한국 종교정치의 역사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촛불집회와 더불어 태극기집회는 한국사회에서 최근에 두드러지는 군집행위이면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종교와 국가의 관계 변화, 종교 내부의 자원과 구성원의 변화, 종교의 사회적 의미 변화가 낳은 결과다. 그런 점에서 이는 한국 현대사의 종교, 정치의 변동과 맞물려있다. 게다가 종교적 수사가 난무하고 종교세력과 정치세력이 결합하는 현재의 광장정치에 주목한다면 광장에서의 종교정치의 변화와 특성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본 글은 광장의 종교정치가 각 시대에 따라 공간과 주체,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정치가 대중들의 시위와 집회의 군집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1970~80년대에 독재정권 하에 등장한 종교정치는 이분화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종교정치의 공간 역시 분리

1) 본 글은 미완성의 초고입니다. 인용을 금합니다.

되어 있었다. 1990년대 나타난 가톨릭, 불교, 개신교의 정치적 과잉 현상과 내부적 보수화, 그리고 종교시장의 팽창과 종교 공간의 의미 변화는 종교정치의 성격을 급속히 변화시켰다. 1990년대를 지나며 주요 종교들은 중산층의 생활 공간으로 변모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위한 종교정치의 공간은 사라졌다. 2000년대 특정 종교의 자원독점과 정치적 세력화는 지금의 보수적인 종교집단을 육성했고 혐오주의의 종교를 양산했다. 특히 한국 종교의 중산층화 과정에서 포섭되지 못한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이 현재 광장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특정한 계층적, 세대적 특징을 보이고 그들의 경험은 기억의 정치를 작동시킨다. 이들을 동원해서 만들어지는 원색적인 종교정치의 수사는 과거 독재정권의 친미반공주의를 닮아있지만 이는 과거로의 회귀라기보다는 탈성장시대의 종교를 움직이는 '혐오주의'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디지털 여성혐오와 범죄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대응과 과제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우리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소 견해차이가 존재하지만, 1990년대 후반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1980년대 여성계의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년 1월5일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촬영물’ 관련(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규제 조항이 1998년 추가되었으며, 이후 관련 규제가 계속 강화되었다. 1997년에는 청소년의 성매매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당시 청소년이 직접 찍은 <빨간마후라> 비디오 사건, 영화 <거짓말> 상영을 둘러싼 대립 등이 크게 논쟁이 된 바 있다. 당시 이를 계기로 지금의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2월3일 제정되었다.

이후 워터파크에서 여성 몰래 동영상 촬영, 공공화장실의 여성 카메라 촬영사건, 소라넷불법촬영물 제작·유통, 웹하드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운영자·사업자 구속,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은 갈수록 확대·진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경한 처벌과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대책들이 대폭 도입되었다.

최근 웹하드, 다크웹, 디스크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 밀해지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조직적 또는 성착취산업으로 확대·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반(半)영구적이며 확장성이 커서 피해차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김소라, 2018; 전윤정, 2020)¹⁾. 하지만 그동안 법과 정책에서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물 제작, 유포, 소지 등에 대해 인쇄물, 촬영물 등의 공급행위를 중심으로 처벌해 왔고, 그마저도 몰래 촬영은 사소한 장난이며, 물리적 성폭력이 아니라는 범죄성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지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착취 범죄로 밝혀지면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 지난 20대 국회와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와 관련한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강화, 예비 음모죄 신설, 소지·접근·시청 등의 수요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淫亂物)’ 용어가 ‘성착취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카메라 촬영등 음란죄의 강화, 정보통신기술 사업자의 책무 강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경한 입법정책 대응이 마련되었다.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공급자에 대한 처벌에서 소지, 접근, 시청의 수요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방지 의무와 모니터링 등의 책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하였다(전윤정, 2020).

이 글에서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도입과 확대를 계기로 디지털상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소비, 포르노그래피의 유통이 성폭력과 성산업으로 급속히 확대 진화되는 상황과 정책과 법과제도의 규제전략의 굴절과 이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 국회, 사법체계 등에서는 부랴부랴 이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사적인 카메라 촬영물과 음란물에 머물렀던 디지털성범죄에 인식에 대한 전환과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뿐이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규제제도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과 감시·신고체계의 제도화, 위장수사(잠입수사)제도도입, 독립몰수제도 등이 추가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확대·진화하였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처벌제도의 실

1) 김소라(2018), “디지털성폭력의 변화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아시아여성연구』, 제57권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전윤정(2020),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 분석』 제16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질적인 작동, 여성혐오문화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성찰과 교육, 나아가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성착취 산업,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反혐오 투쟁의 동학: 일본 가와사키시의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사례

이태정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일본에서 ‘포괄적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9년 12월 13일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와사키시(川崎市)에서 「차별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해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혐오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50만 엔(형사죄)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서 ‘부당한 차별’이란 인종, 국적, 민족, 신조(신념), 연령, 성별, 성적지향 및 자기인식, 출신,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의미한다.

가와사키시는 일본 수도권의 게이힌공업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기부터 이주한 재일교포와 그 자손들이 생활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의 집단거주지이다. 식민지, 이주, 민족을 둘러싼 과거사와 재일교포 문제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화학공업지대라는 특성이 이주노동자를 유인하여, 중국 및 아시아 각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2012년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난 반일 데모를 계기로 일본의 극우 국수주의 집단 - 대표적으로는 2006년에 결성된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 이 재일코리안 집중 거주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혐오 데모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와사키시의 사쿠라모토(桜本) 지역에 들어와 2013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 ‘반일극좌와 불온외국인으로부터 가와사키를 지키는 데모’를 이어갔다. 혐오 발언의 수위와 행동이 점점 과격화되자 가와사키 시민과 공무원, 가와사키시의회가 힘을 모아 「혐오 행위(hate speech)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요구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하였다(2015년 3월). 2016년 1월에 「혐오발언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가와사키시민 모임(All Kawasaki)」이 결성되었고, 같은 해 3월 가와사키시의회는 ‘모든 차별의 철폐를 위한 마을 만들기 추진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뒤이어 6월에는 요코하마지방법재판소가 시위대에 대해 사쿠라모토에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17년 10월 시장 선거에서 모든 차별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조례 제정을 약속받았고, 2년 동안 협의를 거쳐 2019년 6월 조례안 발표, 12월 가결에 이르게 되었다. 가와사키시의 「차별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일본의 외국인 혐오의 사회구조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다. 일본의 “합리적 시민들이 우익 국수주의 세력에게 제동을 건”(이종구, 2019) 것 자체로 의미있는 실천행위이다.

먼저, 일본의 외국인 혐오의 사회구조는 2010년대 이후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반중혐한’ 사상을 확산을 계기로 가시화되었지만, 그 역사는 메이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도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회적 멸시를 제도화한 부락차별, 내부 식민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홋카이도 아이누 및 오키나와인 차별, 그리고 구식민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메이지 유신과 식민지, 2차 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1980년대 이후 아시아 및 남미로부터의 노동이주자인 ‘뉴카마(new comer)’에 대한 차별이 잠재적 범죄자로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혐오 표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를 막으려는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재일교포의 권리투쟁의 성과의 바탕위에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이 교류하는 오늘날의 변화를 반영한 성과이다.

다음으로, 일본사회가 만들어낸 외국인 혐오는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정치인들의 행위- 2000년 전후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의 혐오 발언, 2001년 4월 ~ 2006년 9월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및 2005년 봄 교과서문제와 영토문제, 그리고 아베 정권의 개헌(평화헌법 개악)을 둘러싼 일련의 행위들 -들이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상시적 차별과 혐오 행위의 일상화를 특징으로 한다. 2000년대 전반 인터넷(니찬; 2ch)을 통해 인종주의 및 제노포비아를 결합한 ‘넷 우익’이 성장한 것도 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넷우익을 비롯한 일본의 극우 국수주의자들이 배려하는 마이너리티는 ‘선량한 소수자’이다. 즉 동화와 종속을 전제로 존재해야 한다.

이 관점에 서면 일본(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인) 및 중국(인)은 일본(인)의 자긍심에 상처를 내는 존재가 된다.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일본인과 외국 출신의 이주민들이 모두 지역주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우익 국수주의자들이 지향하는 강한 도덕성과 국가상에 균열을 내는 역사적 실천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의 외국인혐오와 배외주의는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경제의 쇠퇴 과정에서 나타난 일자리 경쟁이 야기한 어두운 결과 중 하나이다. 고도성장기 일본인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자신이 일하는 기업으로부터 찾았다. 지역사회(출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기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던 일본인들이 버블 경제 이후 도산, 실직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덴티티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일본인’ 아이덴티티이다(永田 2013). 일본인 아이덴티티는 경제적 격차에 따라 사회 외부로 몰려났던 빈곤 노동자층을 다시 사회 내부로 불러들였다. ‘일본인’은 일본인이기에 존경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일본인인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는 존재”이다.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노동-환경-지역을 둘러싼 장소성과 공존공생의 과제를 공유하는 ‘지역주민 아이덴티티’의 가치를 읽게 해 준다.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2007년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이 제정안에는 병력,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 등 총 20개의 차별금지조항이 명시되었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재계와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대가 이어졌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며, ‘동성애허용법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10월 31일에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삭제했다. 2010년 4월 법무부가 다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법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마련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하였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순으로부터 어떻게 ‘포괄적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혐오의 지정학 : 냉전분단체제와 호모포비아

전원근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이 연구는 북한의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 호모포비아와 냉전분단체제와의 결합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북한사회의 호모섹슈얼리티가 정치적, 역사적,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와 같은 북한 내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 한국의 통일담론, 아카데미의 인식론 등 외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북한 당국의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반응은 UN 등 국제사회와 같듯하기도 하고 한국사회 일부의 반응과 서로 공명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호모포비아가 어떠한 지정학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연구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통해 북한 성소수자 문제를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기존의 정치구도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북한 내부의 여러 현실들을 포착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에서 생성되는 여러 감정들과 관점들의 충돌, 이해불가능성의 어떤 인식론적, 방법론적 난관들을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남한의 연구자는 북한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자마자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기본적으로 자료의 접근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슈들 - 북한 사회의 젠더, 섹슈얼리티, 친밀성 구조 등 - 을 다룬다는 행위 자체가 제도 속에서 해석되고 배치되는 방식들에 있다. 한국의 제도화된 분과학문 체제 안에서 퀴어 연구는 우선순위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들에 밀려나며, 특히 안보, 군사, 외교, 통일 등 '더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에서는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현실정치에서 성소수자 이슈는 냉전분단체제로부터 기인하는 진영논리에 의해 이용되거나 '나중'으로 추방당한다. 한국의 현실정치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나누는 중요한 잣대이며,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주장하는 보수진영이 선점하고 있는 담론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성소수자 이슈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정책에 대한 비난에 결합되기도 하고, 개신교계열의 반동성애 운동과 결합하여 이성애규범적 통일 담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진보진영에서 성소수자나 퀴어 이슈는 이성적인 이해의 범주에 포섭되지만, 동시에 다른 시급한 과제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성애규범이 '다수'의 의견으로 재현될 때는 정치적 지지자 결집의 '방해물'로 인식된다.

연구자는 곧 한국 사회에서 퀴어 혹은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세력에 따라 입장이 나누어진다고 보거나 그러한 냉전적 진영논리를 관통하여 작동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일탈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는 어떠한 통계학적 경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냉전분단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탈식민 국가형성 과정이 이성애규범성을 자연화, 제도화시켰던 것과 관련된다. 과연 한국의 '전통' 속에 호모섹슈얼리티가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별개로, 오랜 기간 동성애와 같은 일탈적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미국(미제) 또는 일본(일제)이라고 하는 타락한 변태적 외국 문화로부터 오염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정치적 공세나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남한이나 북한, 또는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에서 퀴어 연구는 시작과 동시에 배타적인 냉전 지정학의 희생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

연구자는 또한 북한 사회에는 '성소수자' 지칭되는 대상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린다. 어떠한 관계적 양상들은 있을지라도, 북한에는 우리가 공유하는 정체성의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연구들은 식민지기의 동성애 담론들과 분단 이전 기층문화의 동성간 성적 실천들이 남북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 호모섹슈얼리티 문화나 정체성, 개념이 없다면, 그것은 ‘왜’ 없어졌는가? 과연 부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 연구자는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냉전기 공산권과 중립국가들과 활발히 수교를 했으며,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과도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해왔는가? 그것이 북한의 정치와 자기이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차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론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그렇지 못한 북한이라는 관점으로 이어지기 쉽다.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의 성소수자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남한과 비교하여 북한을 ‘뒤쳐진’, ‘고립된’, ‘후진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소수자 인권이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틀린 서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당성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기존의 서구와 비서구, 선진국과 후진국,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의 체제의 구분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의 섹슈얼리티 수행을 문명화되고 올바른 것과 야만적이고 그릇된 것으로 구분하는 잣대와 연결된다면, 연구자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연구자로서 북한의 성소수자를 다룬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성소수자 탄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작업만으로 충분한가? 결국 연구자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탈)식민 과정과 분단과 냉전의 경험이 한국사회의 모든 이슈들을 처리하는 공통의 인식론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러한 조건과 인식 자체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것은 ‘(퀴어)지정학’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된다.

북한 사회에서 호모섹슈얼리티는 내부와 외부, 민족과 제국, 순결과 오염을 나누는 기준점으로 이용되며,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과 충돌하면서도 남한의 일부 통일 담론과 맞닿아 있다. 또한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북한의 태도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요소로서 재일조선인 귀국사업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은 북한의 기층 사회에서 나타나는 호모섹슈얼리티의 여러 요소와 수행 양상들이 공식적인 담론의 층위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한 연구가 남한 사회에서 퀴어 연구가 부딪히는 문제들과 맞닿아 있으며, 한반도 퀴어 연구의 과제를 (탈)냉전분단체제의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볼 것을 요청한다. 이 연구는 북한 성소수자 연구를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모색의 시도로서, 냉전분단체제 속에서 연구자가 부딪힐 수 있는 방법론적·인식론적 이슈들을 돌파하기 위해 퀴어 지정학의 관점을 주장한다.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2 부
13:30 ~ 15:30

일반세션 3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과 과제

회의실 2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의 전망

김철식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1. 21세기 디지털 자본주의

● 디지털 자본주의의 전개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기술발전이 경제와 사회, 인간의 삶과 노동에 점차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기술발전이 자본축적 요구와 결합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자본주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 디지털 자본주의의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 디지털화(digitalization)
-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 플랫폼(platform)

2.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산업의 변화

- 제조업
- 서비스업
- 플랫폼 사업 모델의 등장

3.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의 탈경계화

- 일과 여가, 일터와 집터, 노동과 일상생활의 경계 약화
- 고용과 자영,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 약화

4. 코로나 19와 디지털 자본주의

- 코로나 19는 언젠가부터 진행되어 온 디지털 자본주의가 가져온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음.

- 탈경계화된 노동 영역에 코로나 19의 충격 집중
- 자본주의 임금 중심 사회의 한계 노정

5. 무엇을 할 것인가?

- 취약부문과 영역에 대한 산업 및 사회정책
- 디지털 기술에 대한 노동과 시민의 개입과 참여
- 탈자본주의 전망의 공론화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정치의 재구성

조계원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1. 정치양극화 시대의 정치의 역할

- SNS 등을 통해 확장되는 정치의 팬덤화. 정당 내 열성 지지층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가 이러한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임. 이로 인해 온건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확산되고, 정당의 대중동원력이 약해지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 가짜뉴스나 음모론이 늘어나는 상황은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강한 연대감을 지닌 집단 내의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 현상과 맞물려 합리적 토론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음.
-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의 생존에 있어 중요했던 비공식적인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를 제시. 정치인들 스스로 국회 내에서 상호 관용의 규범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합의 관행을 누적해 나갈 필요가 있음.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 기구의 권한을 약화 또는 우회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예: 대통령 시령명 남용을 통한 행정권 과용은 민주주의를 전복하지 않으면서도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민주주의가 전염병의 확산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실존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음(런시먼 2020, 2장). 이러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할 때 적극적 지지자 동원에 의존하는 정치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코로나 방역과 사생활 침해 논란).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

2.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온라인 행동주의

- 디지털 기구의 발달은 새로운 기술적 플랫폼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경우, 시민들의 의제설정권한과 정책 응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분노/혐오와 같은 감정에 기초한 청원들로 인해 공론장을 피폐화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송준모·박영득 2019).
- 전통적인 정부 기구에 대한 불신 증대는 온라인 행동주의를 낳고 있음. 온라인을 통한 대중적 망신주기(public shaming) 문화(‘조리돌림’, ‘신상털기’ 등) 확산되면서, 디지털 지배(digital domination)의 위협성도 증가함. 최근의 디지털 교도소, 배드 파더스 사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응보주의적 분노 감정과 결합해 대중의 직접적인 평판 규제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이와 같은 분노에 기초한 대중의 행동주의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시민의 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적 실험과 동시에 기존 정치제도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행동주의는 자신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불공정’에 대한 인식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음. 여기에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 진입의 문이 좁아진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조귀동 2020). 차별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불공정’, ‘무임승차’ 등으로 비판하는 기저에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함. 이러한 박탈감을 완화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재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이것이 사회적 불신과 혐오의 증가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다혜
서울대 법전원 강사

본 발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기존에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의 노동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망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하나, 많은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에 의해 기대되는 돌봄 의무를 떠맡고 있어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여성의 노동은 3가지 측면에서 불평등에 처해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비정규 고용의 비율이 높은 고용형태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 둘째, 가정 내에서 필요한 가사, 육아 등 무급으로 행해지는 돌봄노동을 주로 여성이 떠맡게 되어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돌봄 불이익(care penalty), 시간 빈곤(time poverty)의 문제를 겪는 형태의 불평등이 있다. 셋째, 간병인이나 아이돌보미 등의 직업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불평등이 있다. 유급 돌봄노동자의 노동은 법과 제도에서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유급 돌봄노동자는 아직까지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유급 돌봄노동자가 겪는 불평등은 곧 여성 노동 전반의 교섭력을 낮추는 추가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래한 ‘디지털 전환’,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의 부상 등은 노동 전반에 있어 새로운 경향을 가져오고 있다. 첫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전체 고용률이 줄어들 것 인지에 대해서는 학술적 찬반이 여전히 갈리고 있으나, 주로 저숙련 노동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매개되는 플랫폼 노동은 진입 장벽이 낮고 노동법의 본격적 규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근로(decent work)와 거리가 멀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디지털 전환은 비대면, 온라인 노동의 수행을 통해 일과 삶 양립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에 가정에서 젠더 불평등을 이미 겪던 여성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 및 그에 수반되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에게 유리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젠더 불평등이 고착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성 노동에서 젠더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돌봄의 여성화, 즉 돌봄노동이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에게 불공평하게 전담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므로, 디지털 기술혁신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 노동의 불평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정에서의 돌봄노동(care work)과 일터에서의 임금노동(wage work)은 재생산을 매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디지털화가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임금노동을 비롯한 여성의 노동 전반에 대한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을 일터에서 직업으로서 행해지는 유급 돌봄노동과, 육아 및 가사 등 가정에서 부담하는 무급 돌봄노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특히 유급 돌봄노동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최근 미국의 ‘ubercare’, 우리나라의 ‘대리주부’ 등 디지털 플랫폼 앱을 통해 가사노동의 구매 및 대행이 중개되는 현상, 즉 필자가 이 글에서 ‘디지털 플랫폼 돌봄노동’으로 명명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플랫폼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여성이 가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가사, 양육 등 돌봄노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이 일과 삶 양립(work-life balance)에 기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여성의 남성화’ 뿐 아니라 ‘남성의 여성화’도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선택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2 부
13:30 ~ 15:30

일반세션 4
생태 정치의 균열 변형

회의실 3

사회-자연 이분법 균열의 정치생태학: 구피천 구피들의 자연사와 온도의 정치

김준수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본 연구는 최근 사회-자연의 이분법적 구분이 해체되는 균열 지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환경사회학, 정치생태학 영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비인간 행위자의 인간 사회의 개입과정에 대한 논의들은 기존의 고정적 개념으로서 바라보던 공간, 사회, 환경에 대한 보다 관계론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접근은 환경사회학에서 다뤄온 정책, 조직, 행위자에 대해 근본적인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개념적 경계의 구분을 해체할 수 있는 사례로 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죽당천(구피천)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와 자연의 혼종적 관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피(*Poecilia reticulata*)는 난태생송사리과 어종으로, 열대 관상어 중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고기이다. 구피는 화려한 외관과 상대적으로 쉬운 사육으로, 한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관상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널리 알려진 어종이다. 또한, 구피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을 재현하는 종으로, 특정 색감을 내기 위한 다양한 브리딩 방식들이 존재한다. 특히 관상어 시장에서는 구피의 색에 따라 고정구피, 펜시구피, 막구피로 구분된다. 고정구피의 경우, 부모세대 유전 형질을 유지시킴으로써 전체 색을 같은 색으로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 펜시구피의 경우 색이 서로 다른 고정구피를 교배시켜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 나타난 구피를 의미한다. 막구피의 경우, 다양한 형질의 구피들의 세대 간 교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색이 발현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색감의 차이와 유전 교잡 등을 통해 관상어 시장에서도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구피는 열대 관상어로, 적도 인근 국가에서 수출되다가 현재는 국내에서도 자체적인 번식과정을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구피는 열대 관상어로, 26-29도 정도의 수온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겨울철 2-4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는 한국의 하천에서는 '야생'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한 경기도 이천의 죽당천은 인근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의 폐온수 배출로 인해 연중 약 28-31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6km 정도의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고 남은 폐온수가 죽당천으로 방류되었고, 누군가 그곳에 구피를 '떼기'하면서 구피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 2018년 5월부터 일부 관상어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죽당천에 구피가 서식하고 있다는 정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2019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18년부터 알려진 죽당천의 구피들은 겨울에도 28도 이상의 수온이 유지되는 환경 속에서 자리를 잡아 2020년 현재까지도 계속 번식해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2019년 3월 봄부터 2020년 1월 겨울까지 5차례에 걸쳐 1년간의 죽당천 구피에 대한 탐어활동을 통해 죽당천에 서식하는 구피 종에 대한 동정과 해당 천에 서식하는 다른 어종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천 구간에 따른 온도 변화 과정을 측정했다. 그 사이 죽당천이 '구피천'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외래종의 국내 정착에 대한 위험성이 대중적으로 환기되면서 국립생태원에서도 유해성 평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필자의 현장조사와 국립생태원의 유해성 평가 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구피천 구피들의 상태와 종, 특성들의 변화과정을 검토한다. 그 결과, 죽당천의 구피들은 약 2년간의 서식 환경 적응을 통해 대부분 막구피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내 하천 우점종인 송사리와 대륙송사리 등을 밀어내고 특정 구간(온폐수 방류구 700m 내외)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집어를 통해 확인된 구피들은 대부분 막구피의 형태로 수류가 빠르지 않은 물가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구피를 먹이로 하여, 붕어와 참붕어, 드렁허리 등 토착종 민물고기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특히 1년간 계절 변화가 주변 경관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겨울에는 수온과 대기의 높은 온도 차이로 주변에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주변 경관의 차이는 직, 간접적으로 구피의 개체 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피천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구피를 채집해가는 일이 일상적으

로 일어나게 됐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주변에 많은 증기 발생으로 사람들의 접근이 뜸해져 오히려 이 시기 구피천의 구피 개체 수가 늘어가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의 집어 활동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열대 관상어 구피가 약 2년간 한국의 하천에 적응하며, 번식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회-자연의 이분법 해체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강조한다. 특히 인류세(Anthropocene)의 맥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형해낸 '사회자연(socionature)'의 개념을 통해 구피천 혹은 죽당천으로 명명된 이 공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변형되고 조정되어온 구피들의 물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불러온 인간 사회, 특히 물생활로 불리는 관상어 취미 활동가들 인식론적 성찰 과정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구피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산은 인간들로 하여금, 외래종/토종, 어항/하천, 야생/인공의 이분법에 대한 성찰을 불러왔다. 그뿐만 아니라 죽당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유기 동물'에 대한 반성을 불러오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코 단일한 하나의 인간 종으로 구성된 '사회'를 구성한 적이 없었으며, 또 단일하고 단순화된 '자연'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을 존재론적으로 환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코 사회와 자연이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혼종적으로 상호 구성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찾아가고자 한다.

기후변화 담론의 결과론적 수용주의: 한국 에너지전환 담론의 융합 양식을 중심으로

최규연
연세대학교

I. 머리말

탈성장사회는 산업화로 축적된 총체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성장우선주의가 아닌 인류공존의 가치 논리를 제도 구축의 원칙으로 삼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년 간 여러 국가에서 추진된 에너지전환은 그 같은 인류세적 원칙을 고도로 구조화된 산업부문에 적용하는 사회적 실험이었다.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은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적극적 정책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나 정권교체와 각종 갈등을 경험하면서 진퇴가 반복되었다. 이 같은 정책사에서 기후변화 담론은 다양한 성장논법과 연계되었고, 그러한 융합 양식은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제도에서 기후변화 담론이 가지는 의미론적 위치와 제도 구축에 기능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의 담론적 차원에 대한 제도주의 설명을 이론적 접근으로 사용하였으며, 정책 문서와 전력산업 전문잡지 투고문을 기반으로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II. 구성주의적 제도주의: 제도 구축과 담론의 동학

제도의 구축과 변동에 있어 담론이 가지는 의미는 신제도주의 내 구성적 제도주의 접근에 포함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담론적 제도주의에서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로부터 제도의 세 가지 담론적 차원에 대한 이론이 도출된다. (1) 먼저, 제도 규율이 제시하는 현안에 대한 설명의 타당성과 문제해결 방식의 적절성은 제도의 규범력을 형성한다. 담론적 제도주의는 이 같은 제도의 내용을 현실인식, 가치지향, 행위요청의 의미요소가 연결된 ‘정책 담론’으로 개념화한다. 제도 변동(가령,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은 정책 담론과 개별 사회의 지배적 담론(영국의 자유주의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담론의 연계 관계는 제도 구축의 여부와 방식을 설명한다. (2) 이 같은 구체적인 정책 담론 작동의 기저에는, 공식 제도가 가진 규율 형식의 객관성과 제도적 규율이 결정되는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규율이 적용되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성 담론’이 존재한다. 구제도주의에 속하는 고전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베버가 말한 합리적 지배의 구현물로서 정당성민음에 기반하며, 루만과 하버마스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절차를 통한 정당성은 제도에 대한 담론의 의미적 하부구조를 구성한다. 즉 제도의 작동에는 개별 규율이 가지는 문제해결에 대한 적절성을 넘어선, 메타차원의 정당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제도 성립과 적용의 절차가 가진 합리성에 기반하며, 궁극적으로 제도를 강제하는 공권력의 사실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성한다. (3) 그런데 제도와 관련한 합리성 논의는 항상 이중구조를 가진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공식 규율은 그것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행위방식을 담보하지 않으며, 행위자는 외적으로는 제도 규율을 따르는 듯 행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율과 실행을 분리(decoupling)하여 실질적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는 정책 담론과 정당성 담론의 생성 이면에, 철저하게 현실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화 논리가 생성됨을 의미한다. 이 정당화 역시 합리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담론에는 ‘합리성의 이중구조’가 나타난다.

III. 기후변화 담론의 결과론적 수용주의

현재의 에너지전환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시민참여 자치분권 논리에 기반한 진보정권의 정책과 발전국가 성장논법에 기반한 보수정권의 정책이 수렴된 결과물로 다양한 담론적 연계 양식을 보인다. 기후변화 담론과 성장논리 간 융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제도에는 (1) RPS에 대한 FiT의 보완적 결합, (2) 지역경제 육성과 환경효과를 연결하는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전환 정책, (3) 발전설비 근접 주민과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하는 시민을 통합하는 국민참여형 사업, 그리고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는 (4) 다중 참여와 민영화 논의를 융합하는 소비시장 개방, 그리고 (5) 자치분권과 과학주의가 결합된 분산형 전원 정책이다. 이들 정책에서 기후변화 담론은 탈성장사회의 세계관을 제시하는 총체적 설명 체계가 아닌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라는 구체적 정책 결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고, 이를 통해 산업육성, 경제성장, 개발 논리와 강하게 연계 및 융합하게 된다. 그 융합의 결과, 에너지

전환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며,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산업육성책이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번영과 성장의 기제로 설명된다. 이는 환경 논리가 제도 구축에 있어 부차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공적 자원의 배분을 정당화하는 다른 논리에 철저히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환경-성장 담론 연결의 일차적 이유는 기후변화 담론이 독자적으로 제도 구축을 가져오지 못하는 데 반해, 발전국가 성장논법은 광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공적 자원 활용을 정당화하는 효과가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적 목적을 위해서 성장 논리를 끌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기후변화 담론이 결과론적 수용주의로 변질되는 경향에 있다. 비발전론적이고 인류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후변화 담론이 지역성장이나 개발주의와 같은 '불순적' 담론과 연계를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미적 모순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담론적 진전이 확인된다. 정책 결정을 두고 논쟁이 진행되면 기후변화 담론은 지구온난화의 역제가 최우선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원초적 논리로 환원되는데, 이는 성장 담론에 대한 비판을 촉구하기보다는 결과론적 긍정에 도달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불순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는 친환경 전력생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단지 과징금 회피를 위해 발전공기업이 벌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든, 보조금 취득에 유인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든 그 개별 행위 주체의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만큼 지구온난화는 억제된다. 결과는 항상 지구환경 친화적이다. 이것이 기후변화 담론이 가진 높은 수준의 가치 융합 가능성 및 포용성의 의미적 하부구조이다.

이 같은 결과론적 수용주의는 다양한 국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발견된다.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사의 특이점은 두 번의 정권교체로 인해 기후변화 담론에 연결되는 정책기조가 시민참여 자치분권 논리와 발전국가 경제성장의 논법 사이를 왕복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결과론적 수용주의에 기반한 의미적 연결 역시 두 극단을 왕복 및 수렴하면서 에너지전환 제도가 가진 메타차원의 정당성 담론의 침윤을 가져왔다. 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이 개별 정권의 주기로 축소되면서 제도의 지배에 대한 단기적 전망이 확산되었다. 즉, 현 정책은 현 정권에만 국한된다는 '한정적 규범력'이 에너지전환 제도의 정당성 담론을 구성한다. 이는 나아가 합리성의 이중구조를 심화하여 제도적 규율에 대한 회피전략을 확산했다. 에너지전환 제도의 영향을 받는 행위자 집단은 제도의 목적과는 괴리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를 실질적 합리성으로 정당화한다. 이 같은 전략적 태도는 우회적으로 전력부문의 행위자들이 '에너지전환을 통한 성장'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다층적 담론 생성의 결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싸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모두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한편, 이를 공허한 약속으로 만드는 회피전략과 불신이 제도에 대한 담론의 하부구조를 구성함으로써 각 층위 간 갈등과 모순이 산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IV. 맺음말

에너지전환 제도 구축의 논리는 결과론적 수용주의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 온전한 기후변화 담론은 무분별한 담론적 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장-환경의 담론적 융합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산업적 이윤창출로 동원할 수 있다는 허위적 믿음을 확산하고, 우회적으로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공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침윤해 왔다. 에너지전환은 산업화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며,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산업적 이익은 제도 구축의 부차적 요소이지 본질이 아니다. 에너지전환 제도를 정초하는 논리는 인류와 지구의 공존이 개별자의 생존과 연결되며 현재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자원을 동원해야만 한다는 현실인식이다. 에너지전환의 의미에 대한 명료한 상이 없다면 현재의 담론적 공회전은 제도 구축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다.

탈성장과 맑스의 사회이론

김원태
경상대학교

1. 서론

2020년 상반기 전세계에서 유행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사회적 삶을 통째로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및 유사 바이러스 사태는 단순한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 지구온난화, 무차별적인 환경개발, 공장식 축산 등의 결과라는 것이 점차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생태문제가 오늘날 인류의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임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경제체제와 생활방식이 계속된다면 지구와 인간의 생존이 지속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은 이미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생태적 대안과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녹색경제, 녹색자본주의, 그린뉴딜 등이 회자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대안논의들이 생태문제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경제성장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생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성장(décroissance)’을 구성원리로 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탈성장사회론이 등장했다. 그러나 탈성장사회론은 자본주의분석에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탈성장사회론의 보완으로서 맑스의 사회이론에 주목하고, 탈성장사회론을 맑스의 사회이론을 통해 보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우선 맑스의 사회이론이 가진 생산력주의 혹은 성장주의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맑스의 사회이론이 탈성장사회론을 보완하고 탈성장사회론과 결합될 수 있는 이론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성장과 탈성장

생태위기의 심각성, 원인, 대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논쟁들이 벌어져 왔다. 이 논쟁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태문제가 기술발전을 통해 혹은 시장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신고전파경제학’, ‘생태문제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생태문제가 기본적으로 기존질서 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보는 환경주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는 생태주의’ 사이의 논쟁이 있다. 둘째, 생태주의 내부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강조하는 심층생태학’과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생태학’ 사이의 논쟁이 존재한다. 셋째, ‘사회생태학’과 ‘생태위기를 해명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는 경향’ 사이의 논쟁이 존재한다. 넷째, 후자의 경향 내부에서는, ‘생태위기의 발생에서 맑스의 사회이론에게도 책임을 묻는 생태사회주의’와 ‘맑스의 사회이론이 생태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론과의 결합을 통해 생태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생태맑스주의’ 사이의 논쟁이 존재한다. 다섯째, ‘생태맑스주의’와 ‘맑스의 생태학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경향’ 사이의 논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쟁들의 맥락에서, 논의는 또한 ‘생태문제 전반’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생태위기의 관계’라는 주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 전개되었다. 이 때, 특히 한계를 가진 지구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한계 없는 경제성장추구’가 지목되었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녹색성장, 녹색경제, 녹색자본주의, 그린뉴딜 등의 최근 논의와 정책 또한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아래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론’은 생태문제를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성장론’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추구가 생태중립적일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성장이라는 목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탈성장사회론이 등장했다. 탈성장사회론이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의 기본논리를 의문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태이슈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따라서 오히려 탈성장의 길을 방해한다. 그것은 “두 배로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광고와 같은 것이다. 그 대신 탈성장사회론은 탈성장사회를 위해, 첫째, 시장경쟁과 자본주의적 이윤추구를 넘어서서 자급경제를 만들 것, 둘째, 성장과 경쟁 중심의 신념체계를 넘어서 절제문화를 만들 것, 셋째, 부를 ‘생태적 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개념화하고 ‘생태상황’ 및 ‘인간의 좋은 삶’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발전론에 대한 탈성장사회론의 비

판은 경기가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것과 더불어 생태회복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층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탈성장사회론은 상품생산, 화폐, 자본에 대해서 모호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탈성장사회론은 한편으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상품생산, 화폐, 시장을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품생산, 화폐, 시장을 그것들이 '지배적인 것'이 되는 한에서만 문제로 간주하고, 시장논리와 증여논리(연대논리)의 '혼합'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탈성장사회론은 상품생산사회의 기본범주들에 대한 체계적이지 않은 이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기존의 탈성장사회론이 성장강제를 야기하는 상품생산적 요소들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독일연구협회(DFG)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을 지원한 '탈성장사회들' 연구단의 작업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무엇보다 상품생산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한 맑스의 사회이론에 주목하고, 탈성장사회론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맑스의 논의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맑스의 논의는 생산력주의 혹은 성장주의에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비판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맑스의 사회이론이 가진 생산력주의 혹은 성장주의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탈성장사회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 때, 특히 이 글은 맑스의 사회이론의 '변화과정'과 '양가성'을 분석함으로써, 맑스의 사회이론에 '성장주의적 요소'뿐만 아니라 '성장주의를 비판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3. 탈성장과 맑스의 사회이론

탈성장사회론과 맑스의 사회이론은 일견 쉽게 결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탈성장사회론은 시장경쟁과 자본주의적 이윤추구가 성장을 강제한다고 지적하는데, 이 메커니즘은 이미 절대적 잉여가치생산, 특별잉여가치생산,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에 대한 맑스의 분석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맑스의 사회이론에 생산력주의적이고 성장친화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탈성장사회론은 맑스의 논의를 거부한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이 추구하는 것처럼 탈성장사회론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맑스의 사회이론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무제한적 축적논리에 대한 맑스의 분석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맑스의 사회이론이 가진 생산력주의 혹은 성장주의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즉 맑스주의 중기저작의 생산력주의와 맑스의 후기저작의 성장주의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맑스의 사회이론의 '변화과정'과 '양가성'을 분석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

1) 생산력주의의 문제

맑스는 중기저작, 특히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통한 설명모델을 제시하는데, 보통 맑스의 이러한 논의는 '생산력을 사회변화의 주요한 동력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생산력주의'로, 그리고 이 때문에 생태문제를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 비판된다. 맑스의 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맞서서, 맑스의 생산력 개념을 폭넓게 재해석함으로써 맑스의 사회이론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라는 구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맑스가 자신의 설명모델에서 점차 강조점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맑스의 사회이론의 생산력주의의 문제를 온전히 분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독일이데올로기』(1845/46)에서 맑스는 생산관계보다 교류형태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따라서 생산력과 교류형태의 모순을 통해 사회변화를 설명한다. 그러나 교류형태 개념은 수송과 같은 생산력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생산관계를 엄격하게 지시하지 못하고, 생산력과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맑스는 분업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범주'로 사용하는데, 이 분업 개념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 결국 이 때문에 맑스의 논의는 생산력주의의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맑스의 논의의 강조점과 논증방식은 이후 변한다. 맑스는 『철학의 빈곤』(1847)에서 교류형태라는 모호한 말을 생산관계로 대체하고, 생산관계를 생산력과 엄격히 구분한다. 또한 분업에 역사변화 전반을 포괄적으

로 설명하는 이론적 임무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선언」(1848)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때, 계급투쟁들을 핵심적 요소로 제시된다. 이런 식으로 맑스의 사회이론의 변화과정에 주목하면, 맑스의 논의가 생산력주의로 완전히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탈성장사회의 구상을 위한 '이론적 여지'를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물질대사 개념

다른 한편으로 맑스의 사회이론이 생산력주의 혹은 성장주의에 구속되어 있고 자본주의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맞서, 맑스의 저작에서 생태학적 요소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맑스의 생태학'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재구성론은 맑스가 초기저작부터 자연과 인간의 관계 및 생태문제를 고려했다고 주장하고, 맑스의 생태학의 점진적 형성과정을 추적한다. 이 때, 특히 맑스의 '물질대사(Stoffwechsel)'와 '물질대사의 균열' 개념이 강조된다. 이 논의에 의하면, 리비히의 농화학연구의 영향을 받아 맑스는 '특정한 사회형태'와 '물질대사의 특정한 형태'가 서로 조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가치 혹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가 물질대사의 균열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재구성론은 맑스의 사회이론이 생태위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맑스의 사회이론을 반(反)성장주의, 탈성장을 고려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맑스의 저작들이 - 물질대사 개념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 맑스의 생태학이 형성되고 발전되며 확장되는 '하나의 도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맑스의 각 저작들 사이의 논증구조들 사이의 차이 혹은 이론의 변화과정을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이 논의는 때때로 '맑스가 후기 사회이론, 즉 정치경제학비판에서 분석한 가치와 추상노동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기본범주'를 초역사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은 맑스의 논의에 대한 오독이라기보다는, 맑스의 서술 자체에 양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그러나 '맑스의 생태학의 재구성론'처럼 맑스의 논의의 양가성을 보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양가성을 제거하는 해석, 초역사적인 이해를 비판하는 해석을 전개하지 못한다면, - 이하에서 볼 것처럼 - 맑스의 후기 사회이론이 가진 성장주의적 요소를 비판할 수 없고, 따라서 탈성장사회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맑스의 사회이론을 고려할 가능성은 닫히게 된다.

3) 탈성장과 맑스의 사회이론의 양가성

맑스의 후기 사회이론에서 그는 상품생산사회 혹은 자본주의사회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우선 '자본주의적 사회의 부의 기초형태'인 상품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한다. 이 때 상품의 가치와 이 가치의 실체인 추상노동이 핵심범주이다. 그런데 맑스는 한편으로 가치와 추상노동을 상품들과 이 상품들을 만드는 구체노동들이 '교환과 관련 없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맑스가 가치와 추상노동을 상이한 상품들과 상이한 구체노동들에 대한 사고추상(Gedankenabstraktion)의 결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문에 가치와 추상노동은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맑스는 '가치를 은폐하는 화폐'와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을 비판하고, -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더불어 - '노동시간 혹은 가치 사이의 직접적 교환'(시간전표)과 '노동에 따른 분배'(실행원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맑스의 이러한 논의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로 인해 초래되는 성장주의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성장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가치와 추상노동이 초역사적인 것으로 이해될 때, '자본주의적 부의 형태로서의 가치'는 마찬가지로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용가치, 사용가치의 총체인 소재적 부'와 구별되지 않고, '추상노동'은 마찬가지로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구체노동'과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맑스는 '추상노동이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의는 이 규정을 '(구체)노동이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규정으로 대체될 길을 열고, 그러한 규정을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에 근거해서, 맑스는 '노동한 만큼 분배받아야 한다는 실행원리'를 초역사적으로 정당한 규범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첫째, 소재적 부를 형성하는 - 노동 이외에 자연 및 사회관계와 같은 - 다양한 원천들은 무시된다. 그리고 부의 원천으로서의 지위가 부의 분배를 요구할 자격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면, 이렇게 부의 원천들로서 그것들의 지위가 박탈당함으로써, 그것들은 부의 분

배를 요구할 자격도 없고, 부의 생산을 위해 단순히 지배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된다. 따라서 자연의 일방적인 희생에 바탕해 부의 증대를 추구하는 성장주의는 의문시되지 않는다. 둘째, 노동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생산하고 더 많은 부를 분배받고자 하는 것, 결국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회주의적 노동자운동도 경제성장을 신성불가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맑스는 가치와 추상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개한다. 맑스는 가치와 추상노동을 '상이한 상품들이 양적으로 서로 비교되고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기 위해서, 상이한 노동생산물들과 이것을 만드는 구체노동들이 상품교환에서 각각 공통적으로 취하는 사회적 형태'로 이해한다. 이것은 맑스가 가치와 추상노동을 상품교환에서 일어나는 실재추상(Realabstraktion)의 결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문에 가치와 추상노동은 상품생산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맑스의 이러한 이해에서, 상품교환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형태들, 따라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가치 및 추상노동'은 이 사회적 형태들의 소재적 내용들, 따라서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생산물 및 구체노동'과 범주적으로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고 가치는 추상노동을 자신의 유일한 원천으로 정립하는 반면, 노동생산물 및 그것의 사용가치로 이루어진 소재적 부는 구체노동, 자연, 사회관계 등을 자신의 다양한 원천들로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맑스의 논의의 성장주의비판적 함의가 드러난다. 첫째,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구체)노동이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규정은 신비한 규정으로 비판될 수 있다. 부의 분배를 요구할 자격이 '기본적으로' 부의 원천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다면, 이제 부의 다른 원천들로 밝혀진 자연과 사회관계 또한 부를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자연이 부의 생산, 증대, 분배의 결정에서 자신의 '이론적' 몫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이 더 많은 부를 분배받기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비판적 숙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맑스는 더 나아가 다양한 사용가치의 총체인 '소재적 부'가 인간의 자유시간과 자유활동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자유시간과 자유활동, 이것에 근거한 개인들의 보편적 발전이 '실제적 부'라고 말한다. 실제적 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간의 증대와 자유시간의 축소를 요구하고 부에 대한 기준을 획일화하며 그렇게 획일화된 부의 증대에 몰두하는 성장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맑스의 후기 사회이론의 양가성을 파악하고 자본주의사회의 기본범주에 대한 맑스의 새로운 이해를 따르면, 맑스의 사회이론이 가진 성장주의비판적 요소를 강조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맑스의 사회이론의 변화과정을 고려하고, 맑스의 후기 사회이론의 양가성을 분석하면, 맑스의 논의가 가진 성장주의비판적 요소가 드러난다. 이것은 맑스의 사회이론이 탈성장사회론이 가진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의 이러한 시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태위기의 심각성과 정책마련에 초점을 두는 주된 연구경향과 달리, 탈성장사회론과 맑스의 사회이론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맑스의 사회이론의 변화과정과 양가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주제의 제한으로 인해 탈성장사회론과 맑스의 사회이론의 결합가능성의 이론적 조건만을 검토했을 뿐, 양자가 결합된 이론의 전체적 구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다루지 못했다. 또한 이 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성장주의의 논리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탈성장의 필요성을 서술했지만, - 이것은 첫 번째 한계로 인해 초래되는 것인데 - 탈성장사회에 대한 청사진과 탈성장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이는 이후의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3 부
16:00 ~ 18:00

기획세션 5
포스트성장사회의 전망과 과제

회의실 2

그린 뉴딜과 탈성장을 넘어 '인간적 분배'로

김민정

이 글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그린 뉴딜과 탈성장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점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과 모순되는 공기업과 공공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지원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탈성장론의 토대인 성장의 한계를 자본주의의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 관계로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사회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적 분배'를 제시한다.

1. 그린 뉴딜의 본질

2020년 7월 14일, 문재인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강조 인용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선도형’, ‘도약’, ‘앞서가기 위한’, ‘선도국가’, ‘국가발전 전략’ 등이다. 이는 세계적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강한 경제발전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목표는 국가 간 경제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다.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 원(국고 42조7,000억 원)을 투자해서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 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그린 뉴딜 목표와 다른 행보를 결정했다. 10월 5일, 한국전력 이사회는 베트남 봉양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한다고 결의했는데, 봉양2 발전소에서 2년간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스양이 그린 뉴딜 정책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과 비슷하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왜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일관되게 탈석탄 정책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지 못(안)하는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린 뉴딜을 고쳐 쓸 수 있을까?

2. 탈성장론?

최근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류 정치에서 인기 있는 정책으로 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한국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받아들이는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건지,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다. ...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그린 뉴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세계일보」, 2020.07.18.)라고 평가한다. 이유진 또한 “정부가 두 달 만에 그린 뉴딜의 모든 것을 그릴 순 없었으리라 본다. 이번 발표로 ‘그린 뉴딜이 이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책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더 확장해 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세계일보」, 2020.07.18.)라고 평한다. 하지만 생태주의 진영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의 기조에는 ‘(무한) 성장주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은 주류 그린 뉴딜 정책이 배제한 ‘탈성장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최병두는 「한겨레」 칼럼(2020.6.21.)에서 “코로나 19는 성장의 한계에 썩기를 박았다. 이후 사회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한 탈성장사회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전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020년대 청년에게 나타난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20~30대가 늘고 있다. 임금

은 제자리인 데다 연 1~2%에 불과한 저금리 시대에 청년들은 집 마련 및 노후 계획 등 중장기적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주목한다. 일부 청년은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투자)에 동참한다. 2020년 10월 4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2017~2020.7월간)에 따르면,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 수가 123만 2,123건이며, 한도액은 62조 4,05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새로 만든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이 만든 것이다.

빚을 만들면서까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청년은 그린 뉴딜을 통한 경제 성장 논의와 탈성장론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이에 더불어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서 궁핍화를 겪고 있는 노동자는 두 가지 정책 중 어느 것을 선호할까? 현실적인 답은 그린 뉴딜을 통한 경제 성장일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정서에 대해 노동자 역시 성장중심주의에 빠져있고 심지어는 노동계급 역시 성장주의를 유포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한다. 과연 이 비판은 타당한가?

다른 한편, 그동안 겪은 대공황과 경제 위기가 보여준 사실은 자본이 경기가 침체하였을 때 그 고통은 노동계급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금의 몫을 줄여서라도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자본은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행위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요구는 임금 인상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등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고려한다면, 노동계급의 임금 인상 요구를 성장주의에 중독된 것처럼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인가?

3. 인간적 분배를 향해

일반적으로 경제가 후퇴하는 국면에는 환경의 질이 개선된다. 경제가 위축되면 자본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화석연료에 기초한 경제 성장은 다소 주춤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는 환경오염이 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에서 노동계급의 생활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제 성장의 역설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해서 경제가 성장할 때가 환경에 가장 파괴적이고 경제 위기에는 환경을 덜 파괴한다. 따라서 경제후퇴는 환경에 긍정적이지만 이 시기는 노동계급에게 혹독한 고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의 모순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자본주의의 동학을 토대로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

포스트 성장사회에서 노동의 변화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생태적 위기의 원인으로 기술적인 비효율성을 언급하는 입장이 기술사용과 활용방식의 제한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고, 과도한 물질 소비에서 문제를 보는 입장은 소비와 생산 감소(탈성장) 등을 옹호하듯 생태적 위기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문제 영역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처방"에 대한 제안과 연결된다. 처방, 제안, 반대 제안은 특정 방식으로 생태위기의 원인과 진단을 차별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전환기에 생태적 위기의 원인 진단, 처방은 또한 임노동사회의 전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생태사회적 전환을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성장과 탈성장이라는 생산-소비를 둘러싼 대립적 전망, 둘째는 생산-소비 체계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전망이라는 대립적 전망이다. 이 두 개의 좌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론적, 실천적 각축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대체로 4개의 이론적 전망의 도출이 가능하다.

첫째는 자본주의 혼합경제의 선택적 성장

둘째는 자본주의 혼합경제의 축소와 탈성장

셋째는 사회주의 혼합경제의 선택적 성장

넷째는 사회주의 혼합경제의 축소와 탈성장

(각 입장의 분석 전망은 본문 참조)

□ 생태적 전환과 노동사회의 종말

고용 시스템의 발전,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전망은 생태적 전환 논의 이전에 이미 사회학에서 긴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0-1970년대 서구의 '경제적 기적'이 끝나고 '노동사회의 종말'(Offe; Wilson)이 끝나고 이후에는 '완전고용 사회의 종말'(Vobruba, Beck)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의 배경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노동 시장의 '실패한 분배원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Berger and Offe 1984). 대체적인 분석은 자동화와 컴퓨터화의 다양한 물결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세계화 과정에서 고임금 국가의 작업이 이전되어 구조적으로 유급 고용이 감소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많은 연구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실패한 분배원칙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기본적으로 고용창출보다는 사회보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 사회학에서 출발한 이 논의는 이후 국제적으로도 확산되었다(일레로, Giarini/Liedtke, Rifkin, Gorz). 이후 30년 이상이 지났지만, 결정적인 주장은 대체로 반복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세계화를 통한 작업량(물량) 감소. 그 결과 사회의 '완전고용에 대한 환상'과 노동 시장에 강제 포함되는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는 한편으로는 유급노동을 재분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노동 이외의 대안(사회안보, 커뮤니티 노동, 등)에 대한 대안으로 이어진다(Beck and Felixberger 1999).

반면에 경제학은 이러한 논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계 사회의 요구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는 시장의 힘을 올바르게 규제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여기에서 공급 지향 신고전주의와 수요 지향 케인즈주의는 포스트케인즈주의 이론에서 보듯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상호보완적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용은 끝이 없다. 이들은 여전히 노동량 감소와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과 새로운 수요 발굴로 상쇄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조차 주요 경제선진국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관련 구조적 고용 문제를 만들어낸다는데 주목하고(Reuter 2010; Witt 2013), 생태적 위기가 경제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생태적 변화와 위기가 고용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게도 그간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였다(한국판 종합뉴딜 대책과 그 비판에서도 마찬가지). 이 주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성장의 한계’(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초기에 다루어졌다. 이후 이단 경제학자(Giarini와 Liedtke 1998)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제가 고용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분석은 앞서 논의한 고용 비관론자들의 제안과 일치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경제의 조정과 거버넌스 개념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환경 피해를 억제하고 노동을 줄이도록 설계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9년에 도입된 소위 에너지 소비에 대한 환경세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더 높은 에너지 비용 과세를 통해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사회 보장 부담금과 세금을 통한 임금 노동 부담을 줄이고 노동량을 안정시켜야 한다. 케인즈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대체 에너지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보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도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Bosch 1998).

21세기에 들어 이러한 논의는 보다 급진화되었다. 지구 온난화는 성장과 포스트 성장사회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촉진시켰다(0.1 절 참조).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담론 분야는 노동사회에 대한 매우 극적인 발전 가정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고용 감소와 취업 증가 감소라는 현상 유지 가정을 가정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상이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본문 참조)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3 부
16:00 ~ 18:00

기획세션 6
성장과 인권: 경제발전의 '다른' 원동력

회의실 4

‘비정상성’이 만들어낸 노동착취의 합리화, ‘개척단’

김아람
한림대

한국전쟁과 그 후의 빈곤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나 ‘부랑아’가 되자 1950년대부터 국가와 사회에서 이들을 ‘비정상’의 사회문제로 여겼다. 5·16군사정부는 4.19 당시에 변화를 요구하는 부랑아들을 더욱 ‘비정상화’하며 쿠데타의 정당성을 위해 ‘일소’를 대책으로 내세웠다. ‘개척단’은 5·16군정이 실시한 자활정착사업의 한 부분이었다. 특정 대상을 농촌에 이주시키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개간과 간척을 하여 영구 정착시킨다는 정착사업은 1950년대에 북한 출신 피난민을 대상으로 한 난민정착사업에서 시작하였다. 군정에서는 부랑인, 고아, 한센병 완치자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농지 개간을 통한 자활을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 자활정착사업장은 전국에 분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현황이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23개 사업장을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은 강원, 경북, 전남 등 개간 가능한 임야나 황무지, 간척지가 많은 지역에 분포하였다. 사업에 참여했던 인원은 1964년 기준 8,080명으로 추산되었으나 1960년대로 확장하면 최소한 13,366명이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사업의 대상은 걸인, 부랑청소녀와 부랑인, 고아, 녀마주이가 가장 많았고, 한센병 환자 사업장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갱생원 원생, 수재민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정부는 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전반까지 지속하고 있던 난민정착사업장도 자활정착사업으로 그 용어를 전환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자활정착사업의 중요한 목표는 농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도시의 ‘비정상’으로 여겨진 사람들을 농촌에 배제하는 동시에 개간과 간척으로 농지를 형성하고, 식량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홍보될 수 있었다. 사업의 관할은 보건사회부에서 했고, 대상자를 동원하거나 사업장 현지에서 운영을 할 때는 반관반민단체,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하였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개척단으로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이 있지만 전남 장흥에서도 ‘자활단’, ‘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착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거지왕’ 김춘삼이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진행했던 대한자활개척단을 주목해야 한다.

‘개척단’ 운영에서 벌어진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은 경제개발의 맥락에서 정당화되었다. 우선 동원 방식은 정부의 단속과 강제 동원, 보호소 등 시설 단위의 집단 이송, 사업장 차원에서의 모집, 취업 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경찰, 행정기관, 시설이 협력하였을 것으로 추론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모집이 이루어졌지만(대한자활개척단) 그 실체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은 농지조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이 요구되었다. 날마다 정해진 양 만큼의 개간 작업을 해야 하거나 간척지 조성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 특히 바다를 메우는 형태의 작업은 겨울에도 계속되었는데 바다에 익사하거나 동상, 산사태로 사망하는 일이 잦았다. 수십 명의 단원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사업장 내 식량 사정은 좋지 않아서 배급량은 부족했고 단원들은 굶주렸다.

사업장에서의 가혹행위는 여러 사례가 있다. 사업장 내 조직이 유사 병영조직이어서 철저한 감시가 있었고, 자의적인 이탈은 불가능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졌다. 서산에서는 구호반을 조직하여 감시하였고, 장흥에서도 구속된 상태인 것은 동일하였다. 이탈을 감행할 경우, 구타 등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단원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거나 사업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군대식 생활은 집단적,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위계적인 조직 하에서 단원들이 통제되고 있었다.

단원들은 강제 합동 결혼도 했다. 서산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결혼식이 있었고, 서울시장이 주례를 하는 등 정부에서 지원, 개입하고 있었다. 강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요인이 많았고, 실제로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합동결혼 당시에 권장할 일이자 표창할 일로 여겨졌다. 대한자활개척단(단장 김춘삼)은 197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였는데, 결혼이 정착사업을 성공시키는 수단이자 단장 개인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자활정착사업은 미국 원조를 받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미공법(PL) 480호 2관은 특정 사업에 한정적으로 공여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활정착사업과 이후의 자조근로사업이 그 대상

이 될 수 있었다. 보건사회부는 사업을 관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역할이 컸다. 정부 지원이나 미국 원조물자를 취급할 때 단체나 개인은 정부와 자연스럽게 유착하거나 물자를 횡령·착복하는 등의 비리가 있었다. 단원들의 임금 등 지급 여부, 생활 수준은 사업장 대표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단원들의 노동 결과로 미개간지나 황무지가 농지로 바뀌는 등 그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았다. 적게는 몇 만 평 단위이지만 사업장 전체 면적이 수백만 평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원조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사업 자체가 완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 예산을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이 중요한 이유였고, 한편으로는 경제개발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지조성과 농촌 정착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어진 변화도 있었다. 자활정착사업이 원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세민 대상의 자조근로사업이나 자조정착사업으로 개편된 것 또한 그 이유였다.

자활정착사업은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농지를 분배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전남 장흥 사업장과 충남 서산 개척단은 각각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다. 장흥은 농지 무상분배가 되었지만 서산은 무상분배를 받을 수 없었다. 장흥은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한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 면허를 획득한 김형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장흥의 자활단원도 '현장 취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일한 날짜에 맞춰 토지 분배를 받았다. 하지만 서산에서는 국유지인 폐염전의 개간이 끝난 후 관리 주체가 서산군이 되면서 대한청소년개척단에서 자활정착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무상분배의 근거가 되는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 미비로 폐기되자 이후에 농민들은 유상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척단으로 무임노동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구금과 통제를 받았던 서산의 농민들은 '과거사법' 제정에 따라 진상 규명과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개척단'으로 알려진 자활정착사업이 인권을 무시한 착취적인 노동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억압적인 국가권력만 있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적인 정치 활동과 경제적 이득을 취한 인물들이 있었다. 또한 부랑인,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을 향한 사회의 멸시와 혐오가 함께 작동하였다. 끝으로 정부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자임한 근거이기도 한 점은, 농촌에서의 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개간과 간척이 식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잉여농산물 등 원조물자는 사업을 통해 들어왔다. 성장 지향과 개발 논리가 압도하는 가운데 '비정상'으로 인식되는 주체들의 삶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착취가 합리화되었다. 최근까지 이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던 데에는 비민주적인 정권뿐만 아니라 강요된 '자활' 모토에 동조하는 사회 인식이 함께 존재했다.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2020 한국사회 성매매/성착취 문제의 핵심과 변화를 위한 단초들

신박진영

통시적 관점에서 성매매 문제는 더 심각해졌는가, 동의하지 않는다. 성매매 문제에 더 민감해졌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공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성매매가 끼치는 영향력은 크고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과거 한국이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성매매가 강제되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혐오와 차별을 내재화하여 성매매를 용인하는 단계로 전폭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가 식민화 되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세계의 빈곤하고 취약한 여성들을 빠르게 흡수하여 인신매매 대상국으로 이 시장을 채워나가며 한국사회 성매매가 세계화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내부에는 인종별 가격대를 붙인 성매매 업소가 드러내놓고 영업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기업이 가는 곳에 림살 룡이 생기고, 한국남성관광객이 가는 곳에 청소년 성매매여성까지 대기시키는 것이 문제시되지 오래이다. 디지털강국은 디지털성매매강국으로, OECD가입은 수요를 인신매매로 채우는 위치로 만들었다. 한국사회 성매매는 취약하고 빈곤한 전세계 여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용인한 성매매 수요는 전세계 인신매매 가해세력과 공모한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포주질을 하는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성매매’문제해결은 전세계 안에서 우리가 분담해야할 책임이 되어버렸다. 다행히 ‘반성매매운동’과 ‘미투운동’모두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전세계 여성들과 연결되며 확장되고 있다.

70년대, 80년대까지 ‘성매매’는 우리 사회 아픈 환부이기도 했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는 언제나 존재했고 국가는 그들을 갱생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러면서도 대중의 정서는 ‘불쌍한 누이’로 시대의 피해자로 보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매체의 재현방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80년대 말, 9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과 안보를 위해 접대에 시달리던 ‘우리도 즐기자’-일반적으로 이때의 우리는 ‘남성’으로 통치되었던 경제성장의 역군들-로 시대적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예전같지 않았다. 잉여노동력으로 통치되며 ‘식모’와 ‘공순이’로, ‘윤락녀’로 정말 ‘깍소리’도 못내고 팔려가던 여성들이 현저히 부족해진 것이다. 그래서 90년대는 인신매매 괴담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의 성매매는 외세에 의해 모든 사회적 위계를 넘어서 모두가 피해자였던 시대에서 이제 성/계급 등 모든 교차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차별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전 시대 외세로 덧씌워졌던 가해/권력자의 외피가 벗겨지고, 한국사회가 스스로 가해/권력자가 되어 포주와 구매자로서의 위상을 신자유주의적 자본가와 소비자로 만들고, 성매매여성도 자본의 동시적 포식자로 칭했다. 하지만 가해/권력자임은 당연히 내세웠던 이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무수한 사고 끝에 결국 2000년과 2002년 군산화재참사를 일으키고, 성매매방지법제정을 가져온다.

지금의 한국사회 성매매 구조를 만든 역사적 사회적 맥락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해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른다. 20세기까지 성매매는 우리의 식민지적 피해자성에 기대어왔다. 21세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여성운동’이 본격화 되었지만, 성매매 가해/권력자들의 위상도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띄며 이 성착취/인신매매 시장의 면모도 변화되고 있다. 우리 내부의 성별갈등으로 문제를 축소하려는 가해/권력자들이 만드는 한국 사회 성매매는 더 취약하고 빈곤한 먹잇감으로 이 시장을 채우며 영토를 세계화시켰다. 자국여성들을 인신매매하여 팔아넘기는 숫자보다 더 열악한 경제정치적 환경인 타국의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며 이 시장을 유지시키고 있다.

2020년 우리 사회 성착취/성매매의 문제적 지점들을 실태를 통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지점들을 놓치지 말자.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매매안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이다. 식민지적 근대, 외세와 그에 붙어 기생하던 포주와 대다수 피해자로 호명되던 한국은 점차 성매매를 스스로의 필요로 만든 자연스러운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사회 거대한 규모와 일상으로 자리잡은 ‘성매매’가 많은 이들에게 마치 ‘잘’안다는 듯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줬다. 이러한 기본 인식의 틀은 역사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식민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러한 지배체계를 체화하고, 그것이 기본 세계관, 인식의 틀로 자리잡게 된다고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러한 광경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노예제의 역사가 현재 미국의 인종차별, 특히 흑인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일제강점기 45년이 우리 사회의 세계관, 가치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성매매는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이다. 근대와 함께 찾아온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끼친 해악이, 특히 우리 인식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내부자로 살아온 우리는 알아채기 힘들다. 하지만 그 해악이 이제 세계화되고 있다. 한국은 피해/당사국에서 가해/당사국으로 변모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우리의 가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연대를 통해 세계적 수요차단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이 책임을 요구하고, 실현해나갈 기본 토대를 만들어왔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2020 한국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세계6위 한국사회 성매매 규모와 구조를 와해시키고, 수요차단의 전세계적 흐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념일에만 보호하는 식모와 여차장의 권리

이정은

창원대 사회학과

수치화된 성장과 발전에 매몰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 개개인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권리, 안전 등은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가치였다. 한국사회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절차적인 정치민주화를 달성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성공하였지만, 사회변혁 세력조차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면서 노동 약자에 대한 착취와 불평등한 분배를 개인의 능력문제로 치환해온 구조에 목인해왔다.

이 글은 1960~70년대 공식/비공식 부문 여성노동 중에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희생된 여차장과 식모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의 노동은 중공업과 경공업의 이중 노동구조 속에서 배제되어 근대화 과정의 일부분을 담당하였음에도 “산업일꾼”으로 호명되지 못한 주체들의 삶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서비스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제가 겹쳐진 상황에서 노동자 아닌 노동자의 희생과 그들에 대한 착취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노동은 부끄러운 과거, 잊혀져야 할 기억이 되어버렸다.

1960년대 한국사회는 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공장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부각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정책으로 농촌을 떠나 서울로 몰려드는 값싼 노동력은 공장에 취업하기 쉬웠다. 노동조건으로만 본다면 장시간 노동과 집단기숙생활,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공과 여차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여공을 ‘조국 근대화를 위한 일꾼’이면서 ‘성장의 동력’으로 칭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구조를 은폐하여 그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집안의 살림밀천’이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버스의 안전을 담당한 서비스직인 여차장과 비공식 부문에 종사한 식모는 성장의 동력도, 노동자로서 사회적 의미도 부여받지 못했다. 한국사회의 견고한 가부장 구조에서 누이의 ‘노동력’으로 유일하게 교육받은 남자형제들조차 자신의 성장 동력이며 지원군이었던 그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하였다.

식모는 1950년대 말부터 한국전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특별한 기술 없는 여성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였다. 한국의 가옥구조가 근대화되지 못하였고 가전제품 또한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식모는 식민지기 도시 풍습의 하나였지만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여성노동력의 공급과잉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가난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는 무슨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다며 서울을 동경하며 ‘무작정 상경’한 이들이 많았던 당시 사정도 작용했다.

식모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 외에도 가정과 업소에 숙식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폭력과 구타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었다. 정확한 노동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도 제때 받는 예가 드물었으며 갖은 누명으로 내쫓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나이 어린 식모들이 맞아죽을 지경에 이르거나 굶어죽는 상황이 되어서야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이들의 문제는 인권 문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었다.

여차장의 경우도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 기숙사 생활로 인한 자유의 제한뿐만 아니라, 일명 “뽕땡”을 한다는 이유로 매번 몸수색을 당해야 했다. 여차장들이 억울한 누명이나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여차장들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집단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인권선언기념일에는 이들을 인권의 이름으로 호명하였다. 여차장의 집단 진정에 대해 서울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기업주를 형사 처벌하였다. 또 식모가 저지르는 절도, 유괴와

이들에 대한 사형(私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경찰국 보안과에서는 식모신상조사를 발표하였다. 식모와 관련된 사회문제는 대부분이 비연고(非緣故) 식모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①무단가출상경자 ②식모의 본적, 전주소, 성질, 소행, 그리고 들어오고 나간 이유와 날짜 ③주인과의 관계 ④특수한 인물의 신원조회 등을 카드에 기록하여 무단가출과 이에 따른 타락과 유괴, 절도 등의 계절적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보호정책은 실질적인 인권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인권은 권리를 가진 근대적인 주체를 상정한 개념이지만, 식모는 기념일을 맞아 형식적으로 호명되었을 뿐, 감시와 통제의 '객체'에 불과하였다. 또한 여차장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집단행동은 묵살되었고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연대를 형성하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사라졌다.

이 글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서비스 노동이 가부장제와 연결되어 폄하된 지점, 여성노동운동이 고립되어 억압된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노동으로 혜택받은 수많은 가부장과 한국사회의 이중성, 침묵의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3 부
16:00 ~ 18:00

기획세션 7
경계를 만드는 사람들: 이주와 공동체의 경계

회의실 1

고용허가제 문제로 본 한국 한시노동이주제도와 자유주의적 제약

한준성
한양대학교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대안으로 채택된 또 다른 형태의 한시노동이주제도였다. 이로써 공식 채널을 통해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한국 한시노동이주제도는 그간 이주노동정책의 모델 국가였던 일본의 모델과도 궤를 달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는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내 이주노동 유입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렇지만 과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제도적 변천 과정에서 보여 온 제도적 흠결과 모순이 심각했다. 대표적으로 재고용과 재입국·재취업 방식에 의해 장기체류하는 이주노동자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허가제의 핵심 원칙과 전제인 단기순환 원칙과 한시성의 전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내적 모순과 함께 ‘국민경제의 논리’에 경사된 법규 개정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작업장 이탈 요인을 부추겼으며,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의 자유주의적 기반이 더욱 손상되었다.

그렇다면 그간 고용허가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제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유주의적 제약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런 물음을 토대로 이주노동정책의 시각에서 한국 한시노동이주제도의 골간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제약 결핍을 규명할 수 있는 ‘분석의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고용허가제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제도의 변천과 제도적 흠결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추동되어 왔는지에 주목한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이 글은 이주노동정책의 관점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제약 결핍의 원인을 파악을 위해 살펴야 하는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 시론적 수준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국민경제의 논리’에 경사된 한국 한시노동이주제도의 권리 친화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2장에서는 서유럽의 한시노동이주제도와와의 비교를 통해 ‘국민경제의 논리’에 포획된 고용허가제의 제도 정합성이 낮다는 점과 그것의 비자유주의적 성격을 살펴본다. 이어진 3장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제약의 네 가지 요소들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행위자 요인에 보다 초점을 둔 이주노동정책의 관점에서 한국 한시노동이주제도에 대한 자유주의적 제약의 결핍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분석의 관점’을 네 요소들의 복합구성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노동정책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자원들(정치경제학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 사회운동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자유주의적 제약의 네 가지 복합 요소들로 도출한 ‘결사활동·사회운동’, ‘국제기구·국제인권규범’, ‘통치기구(사법기관, 행정부처, 국가인권기구)’, ‘정치권력(선출직 공무원, 내각, 집권당 등)’에 대해 설명한다. 각 요소와 관련된 정치 행위자는 각각의 고유한 시각과 전문성,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정당성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주노동정책의 방향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은 고용허가제에 나타난 통치성에 대한 비판론이라기보다는 제도적 전환 모색을 위한 실천론의 문제의식 위에서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취 볼 때 본 연구의 한계가 분명하다. 탐색적 연구 수준에 머물러있기에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자유주의적 제약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는 후속 작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이동의 제한이 이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¹⁾

우춘희

90년생 쿤티에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고, 경상도의 A도시에 있는 한 깻잎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쿤티에씨는 한국에서 제조업에서 캄보디아 남성을 만나, 잠시 캄보디아 고향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 둘은 다시 한국에 왔다. 쿤티에씨는 2019년도에 아이를 낳았고, 한 달 된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한 달 반 동안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뒤, 아이를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시 한국을 돌아와서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고용허가제가 보장한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하였고, 기간이 만료되어 2020년 3월, 출국을 앞두고 비행기표까지 샀지만, 캄보디아로 돌아가기 보다는 초과체류로 남기로 결정했다. 결혼식과 양육을 위해 넘었던 국경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 폐쇄되었다. 캄보디아로 돌아간 뒤, 한국어시험을 다시 보고 재입국 절차를 걸쳐 한국에 돌아오려 했지만, 시험일정이 취소되었고,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에 초과체류상태에서 3-4년 정도 더 돈을 번 뒤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쿤티에씨는 친구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자신이 깻잎밭에서 쌓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주와 협상을 하여, 합법 상태의 이주노동자와 같은 월급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 쿤티에씨는 단속되어 추방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지만, 고립된 농촌 사회에서는 외출을 특히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불안감을 떨치려 애쓴다. 깻잎밭에서, 퇴근 후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늘 아이와 연결되어 있으려고 한다.

쿤티에씨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 국경의 이동제한으로 인해 농업현장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 연구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불법성(illegality)”과 그 의미와 관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드 제노바(De Genova, 2002)는 불법성은 이민법의 산물이며, 일상생활의 불법성은 단순히 법이 없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며, 추방가능성과 같이 사회적 공간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이라는 범주는 법적으로 취약한(그리고 값싼) 노동의 예비 인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439-440쪽). 강윤희(2012)는 불법성을 단순히 체류자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불법성은 법적 자격과 주관적 경험으로 구분되며, 미국에 있는 미등록 인도네시아인들을 통해서 이들이 체험하는 신체적, 감각적, 일상적 경험으로써의 불법성을 드러내었다. 김현미·류유선(2013)은 미등록이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주민들과 상호의존성 관계를 맺고, 주변성, 불법성, 영세성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살아내는 생존 전략을 구축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불법성”은 단순히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성되고 경험되며, 생존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는 “불법 외국인”이라는 범주를 통해 오히려 값싼 예비인력을 만들어내고, 이로부터 이익을 취한다. 이러한 “불법성”과 그 경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 간, 미등록노동자 2명을 고용한 한국인 고용주의 집에 머물면서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국경폐쇄, 이동의 제약으로 다시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단속과 추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라는 그들에게는 확실하고 안전성 높은 선택지를 택한다.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해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이 중단되었고, 그 시험을 보고 다시 한국에 올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미 계약체결하여 한국으로 오기로 한 이주노동자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경을 넘어갔다 오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두들 이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한다. 국경을 넘는 과정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도 시간과 비용이 든다.

앞서 언급한 쿤티에처럼, 한국에서 일을 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여전히 위험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터뷰

1)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허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물이다.

를 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이 “불법”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그 마을 다른 사업주들도 공공연하게 “불법 애들은 월급만 받으면 도망가버리지만, 여기 합법 애들은 감옥이다. 우리가 싸인 안 해주면 도망 못 간다”라고 말을 한다. 미등록노동자는 임금체불이 되거나, 더 좋은 일자리 기회가 생기면 떠나지만, 합법체류자격은 가진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다. 미등록 노동자들의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오히려 자신들이 사업장을 선택하고, 사업주와 협상하는 위치로 만들며, 이는 합법체류노동자들보다 어느 측면에서는 더 나은 조건을 형성한다.

A마을의 57년생 김미자(가명)씨는 남편과 둘이 농사짓기가 어려워지자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2명을 고용하였다. 농사일이 보통 특정 시기와 계절에 일손이 필요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일년 내내 고용해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고민을 하다 꺾임으로 작물을 바꾸었다. 일 년에 2번 꺾임 작물을 심으면, 일년 내내 노동자들의 일감이 있기 때문이다. 김미자씨는 예전에는 선주민과 구두로 계약하였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되었다. 김미자씨는 두 명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해고했고, 그 조건으로 각각 180만원을 요구했다가 적발이 되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서명을 해주는 사업주들을 현장에서 종종 만날 수 있었다. 이 또한 엄연히 불법이지만,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원이 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김미자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며칠 뒤 김미자씨는 관할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김미자씨가 사업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서명 명목으로 요구한 것은 불법이며, 오히려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각각 180만원을 주고 합의를 보라고 요구했다. “나는 전혀 몰랐지.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라고 어리둥절한 김미자씨 앞에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을 위해 있는 법이고, 이제 사업주가 되셨으면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김미자씨는 고용센터에 책임이 있다며, 며칠 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에게 정보도 안 알려주고, 코로나로 신청한 애들은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 불법 애들 고용했어요.”라고 큰 소리로 따지듯 말을 하자, 담당자는 “아이고, 난 못 들은 겁니다.”라고 말을 전하며 황급히 끊었다. 국가기관에서 미등록노동자 고용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해야 하지만,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공공연히 농업 현장에 미등록이주민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과 방관으로 침묵한다.

코로나는 농업현장을 많이 바꾸었다. 단속과 추방의 대상인 불법체류자는 방역의 대상인 “미등록”이주자로 호명되었고,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법적 지위 불문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지위가 재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 테두리 안에 존재하진 않는다. 국경폐쇄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체류를 결심하며,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법적인 책임과 보장이 없는 아슬한 경계위에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나간다. 사업주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값싼 조건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노동자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고용한다. 국가기관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침묵과 방관적 태도를 보인다. 즉, “불법성”은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라고 사회가 낙인을 찍고, 일정 부분 사업주와 미등록노동자가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국가가 인력수급부족이라는 이유로 방관하는 단단한 공모관계가 얽혀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참고문헌

- 강윤희 (2012).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비교문화연구*, 18(2), 5-51
- 김현미·류유선(2013). 미등록이주민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재생산: 경기도 A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2), 53-84.
- 조문영 (2020). 코로나 프리즘 - 코로나19가 드러낸 세상의 민낯: 한국사회 코로나 불평등의 위계, 가을호, 16-34.
- De Genova, N. P. (2002). “Migrant “Illegality” and Deportability in Everyday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419-447.

결혼이주여성의 수행적 시민권: 익산시장 이주민 비하 발언 규탄 시위의 경험¹⁾

신민주, 김철효, 고재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건

사건의 시작은 2019년 6월 11일 익산시가 주최한 ‘다문화가족’ 대상 공식 행사에서 시장이 인사말에서 한 발언이었다.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제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²⁾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시장은 한 매체에 ‘해명’을 하였다.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 ...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을 띄워주기 위해 한 말.”³⁾

인종주의와 무지, 편견과 차별, 혐오 조장, 그리고 정치적 감각 부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이 발언들은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치적·시민적 각성과 주체적인 저항운동을 촉발하였다. 2주 뒤인 6월 25일, 비이주민 주도로 설립된 시민사회 단체⁴⁾와 이주민단체⁵⁾가 주도하여 익산시장 앞에서 발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행사를 기획한 단체들의 예상과는 달리 백여 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분노와 항의를 표출하는 집회와 시위로 확대되었다. 사흘 뒤인 28일에는 이들의 자발적인 조직화로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 규모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한 이주여성활동가의 표현대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집단적으로 뭔가 요구하며 사회에 등장한 ... 사상 최초’⁶⁾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 ‘다문화가족’ 정책의 한계, 이주민 운동의 전개, 여성운동 주체의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 사건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 논문은 이 사건의 전개를 ‘결혼이주여성의 수행적 시민권(performative citizenship)’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수행적 시민권

시민권(citizenship)의 정의와 범위, 이주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사회적 함의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들 논의를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 ‘법적 지위와 정치적 성원권(political membership), 권리와 의무, 정체성과 소속감(belonging), 시민적 덕성(civic virtues)과 참여의 실천(practices of engagement), 정치·사회적 평등, 책임, 공동선에 대한 담론’⁷⁾ 등이 주를 이룬다.

1)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3314).

2) 박임근 (2019), 「“잡종강제”, “튀기” ... 다문화가족 비하한 익산시장」, 『한겨레』 6월 25일자 (<http://www.hani.co.kr/arti/area/honam/899207.html>, 2020. 10. 10. 접속).

3) 위의 글.

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다문화가족·건강지원센터 협의회, 전북상담소시설텍협의회.

5) 한국이주여성연합회.

6) 미류 (2019), 「“내 자식이 ‘잡종’, ‘튀기’? 우리도 더는 참지 않겠다”: <인터뷰>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 『오마이뉴스』 8월 13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0608, 2020. 10. 10. 접속).

7) Shachar, A., Bauböck, Bloemraad, I., Vink, M. (2017), ‘Introduction: Citizenship - Quo Vadis?’ in Shachar, A., Bauböck, R., Bloemraad, I. and Vink, M. (eds.), *Oxford Handbook of Citizenship*, Oxford: OUP, p.5.

이러한 맥락 속에서 Isin (2017)은 개인이 권리 주체로서 갖는 ‘수행성(performative)’에 주목하여 ‘수행적 시민권(performative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시민권은 누가 권리 주체로서 ‘행동(act)’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규정하는 제도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 및 정치체에서 창조적(creative)이고 변혁적(transformative)인 가능성 가지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시민권의 수행적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행적 시민권이 갖는 특징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⁸⁾

1. 시민권은 누가 권리의 주체로서 행동(act)할 수 있으며 누가 그렇게 할 수 없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투쟁에 관한 것이다.
2. 이러한 투쟁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비시민 역시 관련 행위자로 등장한다.
3. 시민과 비시민에는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집단이 포함된다.
4. 인민은 권리와 의무를 실행(exercise)하고 요구(claim)하고 수행(perform)함으로써 시민권을 제정(enact)해낸다.
5. 인민이 시민권을 제정할 때는 그 의미와 기능을 창조적으로 변형(transform)시킨다.

결혼이주여성의 수행적 시민권

이 연구는 집회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당시 참여한 당사자(결혼이주여성 단체 활동가, 결혼이주여성 일반 참가자, 비이주민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개를 재구성하여 기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가운데 집회의 조직과 참가 이유, 집회 참여 이후 인식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격, 권리, 책무를 어떻게 새로이 확장하여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집회의 조직과 진행을 통해 시민권의 수행(performing), 요구(claiming), 실천(exercising)함으로써, 여성, 이주민, 부모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수행적 시민권(performative citizenship)을 제정(enact)해내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귀화를 통해 획득하는 법적·제도적 시민권을 넘어서 정치적·사회적 시민권을 포함한 완전한 시민권(full citizenship)을 확보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8) Isin, Engin (2017). ‘Performative Citizenship’, in Shachar, A., Bauböck, R., Bloemraad, I., & Vink, M. P. *The Oxford Handbook of Citizenship*, Oxford: OUP, p.500.

2020 비판사회학대회
탈-성장,
인간됨의 경계를 묻다

3 부
16:00 ~ 18:00

일반세션 5
역사를 역사화하기

회의실 3

박물관/기념관에서 연구하기: 연구주제와 연구주체를 중심으로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어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는 매우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그와 더불어 박물관/기념관 역시 ‘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지어졌다. 물론 이 ‘붐’의 1차적 배경에는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 자원개발이라는 변수가 놓여져 있다. 그러나 박물관/기념관이 한국사회의 과거를 선별하여 재현하고 기념함으로써 ‘기억’과 ‘기념’을 책임지는 주요 담지자가 되었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 그런 만큼 한국의 박물관/기념관이 그 의미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기념관의 주요 기능 가운데 이 글에서 특히 관심을 두는 부분은 ‘연구기능’이다. 연구기능은 사료/유물의 수집과 보존, 전시, 교육과 함께 박물관/기념관의 주요 기능으로 늘 손꼽히는 기능이다. 박물관/기념관에서의 연구는 유물과 사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시와 교육의 깊이를 더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과거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전달한다는 박물관/기념관의 목표를 보다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유물의 수집, 전시, 교육의 기능만큼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박물관/기념관의 ‘붐’을 맞고 있는 오늘날 박물관/기념관 현장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연구환경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박물관/기념관도 관련 연구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해야 하므로 전문/순수 학술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도 가능하며 박물관/기념관은 일상적 대중적인 사회문화영역이므로 좀더 시각적, 대중적인 연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공공역사 연구의 관점도 가능하다.

이글에서는 연구주제와 연구주체의 차원에서 박물관/기념관 현장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그것을 위해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산민주항쟁기념관 그리고 민주인권기념관 여섯 개의 박물관/기념관을 선정하여 각 박물관/기념관의 연구기능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분석해 본다.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박물관/기념관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박물관/기념관 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서울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모두 학술연구와 함께 시각적 요소가 중시되는 전시연계연구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 반면 독립기념관, 부산민주항쟁기념관(부산민주공원/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인권기념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경우 일반 학계의 연구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학술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 초반에는 학술연구 중심이었지만 1~2년 전부터 학술연구 중심에서 전시연계연구도 진행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관의 경우도 최근 전시연계 연구를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연구수행주체의 경우도 박물관/기념관 별로 차이가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내부의 연구자(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연구원 등)가 중심이 되어 연구주체를 기획하고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외부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핵심은 내부 연구자에 의해 추진되었다.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내부 연구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연구네트워크와의 공동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경우다. 민주인권기념관과 부산민주공원의 경우는 내부 연구자는 주로 연구기획과 관리에 치중하고 실제 연구는 외부의 연구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 초기에는 외부의 연구용역이 중심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내부연구와 외부 연구네트워크를 결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연구주제	
		학술연구 중심	학술+전시 연계 연구
연구주체	내부연구자가 연구진행		국립민속박물관(현재) 서울역사박물관(초기)
	내부연구자+외 부 연구네트웍 공동 연구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재)
	외부 연구네트웍이 연구진행	대한민국역사박물관(초기) 민주인권기념관 부산민주공원	국립민속박물관(초기)

<표 1> 연구주제와 연구주체에 따른 기념관/박물관의 연구기능 구분

분석내용을 종합해 보면, 1) 대부분의 박물관/기념관은 전시 연계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거나 그러한 지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처럼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서가 오랫동안 순수한 학술연구를 수행함을 통해 입지를 다진 경우, 기념관이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았고 아직 정식으로 개관하지 않은 민주인권기념관의 경우가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주체의 경우 모든 박물관/기념관은 자체연구역량이 연구를 수행하거나 내부+외부 공동연구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모든 핵심연구를 내부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외부 연구자원을 활용할 필요도 있는가의 문제는 논쟁적이다. 다만, 내부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박물관/기념관 관계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외부연구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박물관/기념관 개관 초기, 예산과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 등이다.

4·19에서 5·16으로: ‘병역미필자 축출운동’의 전개와 ‘병역주체’의 형성¹⁾

강인화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이 글은 병역의무 당사자들의 움직임과 함께 새롭게 제시된 ‘병역’ 개념에 주목하여, ‘한국적’ 징병제 및 병역-시민자격의 초기 형성 과정을 밝히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위하여 1960년대 초반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 전개된 ‘병역미필자 축출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전쟁 및 1950년대의 병역제도 운영에 있어, ‘전후처리’의 지연은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 이행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당사자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전 약 10만 명에 이르던 병력 규모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72만으로 증가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정부는 ‘한미동맹’과 ‘군사원조’를 이유로 대규모 병력의 유지를 고집하였다. 하지만 대량병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반의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의 부담에 있어, 학력과 계급에 따른 차등이 존재하였다. 병역의무의 당사자들은 계급/학력에 따른 차등을 ‘차별’로 인식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 되기 직전까지 불만이 누적되었다.

1960년 4·19를 전후로 병역의무의 당사자들은 ‘병역미필 공직자를 축출’하고, 이를 ‘제대군인으로 교체하라’며 대중운동을 벌였다. 1961년 5·16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사회개혁과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병역미필자 축출운동을 전면화하였다. 이처럼 미필자 축출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위로부터’의 실현에 기초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병역 형평성·공정성 요청을 병역이행자의 ‘인정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수용 방식과 당사자 운동이 제도화되는 양상을 ‘동원의 정치’라는 차원에서 검토한다.

1960년대 병역미필자 축출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시민권적 지위와 병역이행자의 시민자격이 (재)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축출·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병역미필자 집단은 곧바로 ‘구제’의 대상으로 떠올라 포섭 정책이 시도되었다. 병역미필자 ‘구제’ 방침에 따라 ‘국토건설’이라는 병역 ‘대체’ 의무가 부여되었다. ‘비록’ 국토건설단 사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후 (1970년대) 본격화된 병역 ‘대체’ 개념의 제도화로 이어진다. 한편, 병역미필자 축출운동이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정부방침으로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병역제도의 운영 당사자와 병역이행 당사자 사이의 ‘연대’에 근거한 병역이행자의 조직화와 ‘재향군인’ 단체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병역이행자 조직의 ‘국가통합’과 제도화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시민자격이 확립되는 과정과 병존하였다. 이제 군복무자들은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병역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키워드: 병역미필, 병역기피, 병역미필자 축출운동, 병역 ‘대체’ 개념, 병역주체, 재향군인, 국토건설단, 4·19, 5·16

1) 이 글은 작성 중인 논문의 초고이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